

# 서이초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

일시: 2024년 5월 14일(화) 15:00 ~ 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다함께 행복한 교육

교사노동조합연맹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

# 서이초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

## -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 -

● 일시 : 2024.05.14.(화) 15: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프로그램

구분	순서	소요 시간	비고
15:00 ~15:30 (30')	사회자 인사 및 진행 안내	5분	- 사회 : 이선희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
	환영사   • 김용서(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5분	
	인사말   • 국회의원 및 내빈	10분	
	사진촬영	10분	
15:30 ~16:10 (40')	【발제】 [발제1] 교실 및 교육공동체 회복을 저해하는 현행법의 미비점 - 이나연(교사노동조합연맹 자문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발제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와 법 개정안 제안 - 이장원(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평생교사노동조합 위원장)	40분	
16:10 ~17:00 (50')	【지정토론】 [토론1]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사의 직무수행 지원 필요성 - 김혜진(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토론2]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송인영(행복한교육학부모회 부회장) [토론3]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의 필요성(초등교사노동조 사례를 중심으로) - 윤미숙(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교사노동조합연맹 제2부위원장) [토론4] 교실 및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과제(학폭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 홍민정(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토론5] 교권 회복 정책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 신진용(교육부 교원정책과장) [토론6]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김도형(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	50분	
17:00	폐 회		

## ■자료집 차례

<b>환영사</b>	•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4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백승아 .....	6
<b>인사말</b>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8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10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종환.....	12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	14
<b>축사</b>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16
	• 교육부장관 이주호 .....	18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20
<b>발제 1</b>	교실 및 교육공동체 회복을 저해하는 현행법의 미비점   이나연 .....	25
<b>발제 2</b>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와 법 개정안 제안   이장원.....	35
	■ 붙임. 학부모상담민원법 제정안 .....	61
	■ 붙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안.....	76
<b>토론 1</b>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사의 직무수행 지원 필요성   김혜진.....	103
<b>토론 2</b>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송인영.....	109
<b>토론 3</b>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의 필요성 - 초등교사노조 사례를 중심으로   윤미숙.....	113
<b>토론 4</b>	교실 및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과제 - 학폭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홍민정 .....	120
<b>토론 5</b>	교권 회복 정책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신진용 .....	126
<b>토론 6</b>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김도형.....	136



## “선생님은 가르치고, 아이들은 배우고 싶은” 교육 환경을 위하여

반갑습니다.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입니다.

오늘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주제로 한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도종환·안민석 의원님, 백승아 당선인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각을 나눠주실 두 분의 발제자와 여섯 분의 토론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작년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교실 회복을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우리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는 작년 7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실상이 충격적으로 드러났으나, 그 이전부터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들의 참담함과 절박함을 모아 목소리를 내고 움직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일찍, 더 크게 현장을 충분히 바꾸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이자 연장선상으로서 이번에 개최하게 된 토론회의 주제가 ‘서이초 특별법 추진’입니다.

작년과 올해, 교권 4법 개정과 생활지도 고시를 위해 기울인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선생님



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하고, 수업을 방해하고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할 장소와 인력은 마땅치 않고, 지역으로 이관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에게서 도리어 허물을 찾는 위원의 2차 가해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보냈던 선생님들은 희망이 다시 실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두 배의 절망을 겪고 있습니다.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졌던 그 법들이 왜, 어떻게 미비한지에 대해 이나연 변호사님께서 첫 번째 발제에서 상세히 짚어주실 것입니다.

교사의 본질 업무, 학생 분리 지도,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 학교폭력 업무 전담기관을 법제화하고,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한 입법 과제와 법 개정안 제안에 대해 우리 교사노조연맹의 이장원 사무총장께서 두 번째 발제에서 자세히 제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작년 여름, 선생님들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가르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더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되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또다시 좌절과 자포자기 상태로 제대로 펼쳐질 기회 없이 사그라든다면, 교사뿐 아니라 학생,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공교육이 마땅히 가져야 할 위상을 회복하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와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 용 서



## 서이초 특별법,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당선인 백승아입니다.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님과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안민석 의원님을 비롯해 오늘 이 토론회가 이뤄지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교육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이렇게 극한으로 몰린 지금, 과연 우리 사회는 이 말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작년까지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근무하던 저는, 이 토론회의 부제가 무엇보다 와닿습니다. 제가 겪었고 지금 선생님들이 겪고 계신 학교는, 교권 4법과 생활지도 고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할 수 있는 권리와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곳입니다.

서이초 특별법은 바로 그래서 필요합니다.

행정업무에 시달리느라 아이들 얼굴보다 컴퓨터를 더 들여다보기를 강요받는,

생활지도 고시에 명시된 분리조치를 이행하고 싶어도 공간 하나와 담당인력 한 명이 없어 결국 오늘도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민원 응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밤 12시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 하는,

어디까지가 정당한 생활지도고 어디서부터가 정서적 아동학대인지 알 수 없어 학생에 대한 지도 자체를 두려워해야 하는,

학교폭력 업무를 직접 처리하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마주하거나 혹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위해 일정 조율 등 모든 업무를 대리해 진행해야 하는.

이 모든 한 명 한 명의 교사를 위해, 그 교사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온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서이초 특별법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열정 있게 가르치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발걸음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 더 나은 공교육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백 승 아



## 서이초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서이초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교사노동조합연맹, 강민정·도종환·안민석 의원님,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부터 딱 1년 전인, 작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도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학교 현장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로 교권 추락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이어지며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교사 집회가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추락한 교권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교권 보호를 주장해왔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회에서도 여야 논의 끝에 교권 4법으로 일컬어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유아교육법」 개정이 이

루어졌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했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변한 것이 없고 그대로’라며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는 현행법의 미비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발제를 맡아주신 이나연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님,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님을 비롯해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각층의 교육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오늘 토론회 내용을 경청하고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 득 구



## 서이초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작년 7월 서이초 사건으로 우리 교육 현장의 복합적인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교사가 아이들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하는 학교 안팎의 환경,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공고화된 교사 자율성에 대한 부정,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각자도생 경쟁사회 질서의 교육계 투사, 그 결과로 교사들이 교육적 열정과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기 어려운 교육환경 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교육 현장에 쌓여왔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그 부담을 지고 버텨왔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만들어졌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지만, 여전히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금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현장의 선생님 및 전문가 분들과 함께 교실 및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고, 교사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교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며 위기에 빠진 교육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스

승의날을 맞아 아이들이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 속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한 자리가 만들어져 더욱 뜻깊습니다.

소중한 토론의 장을 열어주신 교사노동조합연맹, 강득구·도종환·안민석 의원님,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자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기 끝까지 우리 교육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 민 정



## 서이초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서이초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강득구·강민정·백승아·안민석 의원님, 김용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발제 및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은 교육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교권 4법의 개정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교사로서 존중받고, 온전히 아이들의 성장과 수업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약하며, 교단의 긍지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권 4법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더욱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적절하지 않은 해결책 제시로 교육계의 혼란과 분열이 가중돼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곧장 교권 침해가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를 강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달 발간한 학술지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성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속의 없이 진행되는 제반 조치들은 교육계를 갈라치기하고 현장에 혼선을 주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교육 주체인 교사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까지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와 문제점을 반영한 입법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이초특별법〉의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존 교권 4법 및 생활지도 고시의 빈틈을 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본질 업무·학생분리지도·학교 민원응대시스템·학교폭력업무 전담 기관에 대해 법제화하고,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한다면 교권의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서이초특별법이 내실 있게 준비되는 발판이 되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신속하게 발의 및 통과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교사 본연의 역할과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을 시작으로 교사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힘차게 나는 날갯짓을 가르치고 / 세상을 울곧게 보는 눈을 갖게 하고 / 이윽고 그들이 하늘 너머 날아가고 난 뒤 / 오래도록 비어 있는 풍경을 바라보다 / 그 풍경을 지우고 다시 채우는 일로 /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제 시 〈스승의 기도〉의 한 구절인데요. 선생님들이 처음 교단에 설 때 가진 꿈이 회복되고, 다시 당당한 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 중 환



## 서이초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안녕하세요.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의 선생님들과 교육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현장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와 어려운 고비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많은 변화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교권 회복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난날 선생님을 거리로 나서게 했던 교육현장의 병폐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교권보호를 통한 공교육과 학교현장의 정상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믿고 따르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춧돌을 다시 놓아 봅시다.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우리 학생들이 행복합니다. 선생님들이 금지와 자부심으로 오직 학생과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에 집중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였던 교권보호에 대한 국회와 교육당국의 대책과 제도개선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거리로 나서야만 했던 선생님들의 분노와 호소를 잊지 않고, 더 이상 우리 선생들이 교권침해로 고통받고 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와 절망을 기회와 희망으로 만드는 길에 함께해주십시오.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 민 석



## 교사 노동자 동지들의 권리 보장과 공교육 회복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지원합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 :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  
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교사노동조합연맹 여러분과 오늘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보천리의 자세로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  
을 위해 나아가시는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서이초 사건을 비롯한 현장교사들의 억울한 희생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주었습  
니다.

더불어 교사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국회와 정부당국에 명  
확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권4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교사 노동자 동지들의 노동여  
건은 나아진 것이 없다는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때 공교육이 회복되고 사회가 바로 섭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교육 회복을 위한 지혜가 모이고, '서이초 특별법' 추진이 이루어져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사 노동자 동지들의 권리 보장과 공교육 회복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위해 한국노총 차원의 모든 조직적, 정책적 역량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국노총은 항상 교사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동 명



## 서이초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안민석·도종환·강득구·강민정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발제 및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원년이었던 지난해부터 지역사회, 교육 가족과 함께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며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으로 교권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인 동시에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성공을 위해서는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권 회복 후속 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학교와 가정의 협력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난해부터 강화된 교권 회복 후속 조치의 현장 안착과 교육공동체의 회복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도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 교육 3주체가 상호 신뢰·협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



## 서이초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안녕하십니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입니다.

먼저 이번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를 개최해주신 국회 안민석, 도종환, 강득구, 강민정 의원님과 백승아 당선인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계는 참으로 뜨겁고 아픈 1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통해 현재 학교현장의 실상을 똑똑히 목도할 수 있었으며, 또한 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존중받는 속에서 안심하고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 다행히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이른바 ‘교권4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개정 법률안의 효력이나 교육부 및 교육청의 대책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법률이나 제도가 아직은 시행 초기로서, 제대로 무르익지 않아서일 수



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및 전념 대책이 법률적, 제도적으로 완전치 못해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개최되는 ‘서이초 특별법 국회토론회’가 더욱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아무런 두려움이나 부담 없이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특별법적 차원에서 모색하는 것은 단순히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서 학교의 교육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입니다.

상주의 마음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던 마음을 되새기겠습니다.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겠다는 열정이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정책토론회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안민석, 도종환, 강득구, 강민정 의원님과 백승아 당선인님, 그리고 발제를 맡으신 이나연 변호사님과 이장원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토론 참가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 희 연



---

# 발 제

---



## 교실 및 교육공동체 회복을 저해하는 현행법의 미비점

이 나 연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 1. 학교 현장에 대한 법률 개입의 배경과 문제점

과거에 비해 법률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어 판단과 처분이 결정되는 과정들에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고, 적용 내용과 과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도 법률의 적용과 검토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교의 특성상 같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시간을 영위하는 특징이 있어 다양한 상황들에서 갈등이나 분쟁의 조정이나 질서유지를 위한 선도 필요성, 법적 책임 유무를 관련 법률에 의해 판단하고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들이 자연스럽게 개입되고 적용되고 있으나, 이에 비해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부분은 그 범위가 방대하고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를 체계적·구체적으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실과 학교, 교육공동체간의 신뢰가 떨어지고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져 모든 교육공동체에게 잠정적 위해요소가 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들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한 문제점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는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과정을 비롯하여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걸쳐 나타

나고 있기 때문에 보완과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교권 4법의 개정으로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교원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으로 기준과 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상호간 이해의 범위를 완충하고자 하나 교육활동의 근본적인 역할과 부분을 모두 법규에 나열하여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여러 법률의 개입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인권 및 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수업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반복되는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구상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동시에 규정이 마련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보호 체계 마련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모든 교육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크다는 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 2.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문제점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약칭인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함)의 경우 아동에 대한 성인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반영한 입법목적과 기본이념의 구현을 위한 규정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에 과정에 규정들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진 반면 과거와 달리 인식과 현상이 변화된 부분, 교원의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주의·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교원의 지도<sup>1)</sup>가 교원의 직무 수행의 본질적인 부분임이 명시적으로 반영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최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루어지는 과정의 대부분은 학생에게 지도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24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사의 훈계나 조언이 이루어진 과정과 상황에 대한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난해 교권 4법의 강화나 개정을 통해 변모된 조항들 모두 현재까지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또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결국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해당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교사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신고)사안에 대하여 본 발제자가 아동학대 범죄 피의자가 된 교사의 변호인으로 수사기관(경찰·검찰)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본 다수의 경험에 의한 현행 규정에 따른 적용 및 판단과정에 있어 대표적인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에서 확인하고 있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교원의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지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이고, 이는 형사 처벌대상이 아닌 종전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정도이기에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경우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임을 교사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점과 고충은 이러한 규정들이 마련된 현재에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임.

◆ 교사의 학생에 대한 당시 생활지도가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움.

아동학대범죄 혹은 아동복지법 위반여부를 형사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 범행 도구 자체가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 당시 언행을 아동학대라고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측과 당시 행위는 학생에 대한 지도였을 뿐,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교사 측의 극명히 다른 진술만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

즉, 교사는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교사에게 생활지도를 받아야 했던 아동(학생)의 경우 지도받는 당시 상황 자체에서 불쾌함이나 서운함, 주관적인 억울함 등 부정적인 감정이 수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기반하여 교사에 의해 정서학대 유형의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아동의 진술 그 자체가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로 인정되기 쉬우나 교사의 경우 학생의 생활지도의 이유나 원인에 대한 설명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의 내용으로 전제되거나 추정받기보다는 해당 지도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자체가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기인하였다고 전제되거나 혹은 학생에 대한 지도에 필요한 교사의 권위나 교육학점 관점 자체가 전문적으로 반영되지 못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

은 사실상 뚜렷한 입증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안이 대부분임.

- ◆ 아동학대 사안을 신고받은 수사기관의 경우 신고(고소)대상이 된 교원의 교육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범죄에 대한 변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피혐의자가 된 교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한 중립적이고 구체적인 수사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나, 대부분의 경우 범죄 피해(추정)자가 연령이 어린 아동, 미성년자인 학생이라는 점과 어느 정도 일관된 진술만 있다면 실제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막연히 과장이나 거짓으로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점, 학생의 연령이나 발달 상황에 따른 진술 능력이 미성숙할 수 있다는 점 등에 치중되어 성인인 보호자에 의해 보강된 주장에 대해서 수사방식으로서 구체적인 진술 분석 등은 대부분의 경우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지며, 범죄 사실로 특정된 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인 조사나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한 수사 자체가 목격자들 역시 학생들이라거나 시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임.

이러한 한계점과 대부분의 아동학대 신고 혐의 자체가 범행 도구 등 물증 자체가 있기 힘든 유형(정서적 학대의 주장이 가장 많음)의 범죄라는 속성상 수사가 중립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성인인 교사에 대한 유죄추정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교사 스스로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과거의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에 기한 수사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스스로가 수사기관 이상의 증거 수집과 제출을 해야 하는 실정에서 그 어떤 기관의 협조나 조력을 받기 힘들며 오히려 자칫 이러한 시도조차 범죄 은닉을 위한 ‘2차 가해’를 범한 것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자신의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차단되거나 그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였을 때, 교원의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전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거나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범죄로 판단하려면 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의 본질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일괄적인 범죄 추정되는 것에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 주체의 신뢰 회복과 본질적인 교육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임을 염두에 둔 보완이 필요하다.



### 3.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과 이에 기반한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미비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인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의 경우, 학교 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에 대한 필요성으로 학교현장에 도입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고,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들 역시도 가장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이 개입되어 유형을 정의하고,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교육적인 선도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안 발생 근절을 목표로 하는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로 생각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일반 범죄행위보다 넓게 규정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여러 판례들에 의할 때에도 피해학생 보호의 취지에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유형은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범위가 확장<sup>23)</sup>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사안처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교육적인 선도와 보호조치를 처분하는 과정을 체계적인 처리 절차로 만들고, 모든 각 급 학교에 설치되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형태에서 변화를 취해, 그 전문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목표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부터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의 최초 인지와 1차 사실 관계 확인 역할은 여전히 학교에서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신고의무(법 제20조<sup>4)</sup>) 역시 규정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4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250 판결 [봉사명령등취소](앞부분 생략)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 관계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학교폭력은 그 유형으로 열거된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생에 대하여 신체·재산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해석·적용함이 타당하다.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4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발생 초기에 사안을 인지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나, 해당 규정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과 일상적인 갈등 또는 장난으로 생활지도의 대상인지의 구별이 쉽지 아니한 상황들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보호자들의 민감도는 모두 다른 상황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지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에서는 물론 학교폭력예방 법령과 관련 매뉴얼에 의할때에도 처리 과정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구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담당교사 혹은 담임교사로서 내리는 어떠한 결정으로 인한 불만이나 민원제기 등의 위험부담을 교사들이 떠안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관련 상황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된다는 판단과 함께 가해학생으로 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선도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학생간 일시적인 다툼이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학교폭력과 장난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를 학교폭력사안으로 인지하여 보고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혹은 가해관련학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지한 정도만으로도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각종 민원제기부터 모욕이나 협박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결합되는 사안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가장 큰 고충을 느끼는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로도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교사가 학생들의 상황을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생활지도 대상으로 인지하는 경우 추후 교사가 고의적 또는 자의적으로 사안에 대한 축소·은폐를 하였다는 의혹으로 민원을 제기받거나 각종 감사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교사가 질 것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 가능성을 미리 걱정해야 하는 고충을 겪게 되기도 한다.

본 발제자가 학교폭력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이 고충을 겪은 사례에 대하여 상담한 여러 사례들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 평상시 서로 사이가 좋고, 가장 절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순간 감정적인 대응을 서로 하는 경우를 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되더라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이나 욕설, 툭툭치는 행위 등) 지도를 하는 경우, 학생이 이로 인해 편하지 않았던 감정이나 기분을 주관적인 표현으로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교사가 평상시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판단을 가지고 본인의 자녀에게만 공평하지 못한 지도를 한 것 아니냐는 민원제기, 교사의 지도로 학급에서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민원제기 및 담임교체 등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9. 8. 20.>

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아동학대 신고를 하여 직접 당사자가 되는 교사로서는 생활지도를 한 것 자체를 극도로 후회하거나 자책하고 이러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동료교사들 역시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싶다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음

- ◆ 반대로, 전후 상황을 보더라도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으로까지 인지한 만한 상황이 없었거나 학교나 학급 외에서 학생들간 발생한 사건의 사실 관계 자체를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에 이를 알지 못했거나 지극히 일상적인 사소한 갈등이나 잠깐의 분쟁발생 상황으로 생활지도의 범위로 보아 학생을 지도해온 것에 대하여 교사의 학교폭력 사안 축소 또는 은폐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하거나 제기할 것을 고지하여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담임교사 보직 자체를 회피하고 싶어짐
- ◆ 자녀가 학교폭력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인정하나, 이에 대한 교사의 훈육이나 지도 방식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지나치게 질책하거나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함.(학생의 행위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확인하고 지도하며 서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면 ‘망신을 주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반대로 교사가 따로 해당 학생을 면담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줄 제3자가 없는 상황에서 ‘당시 자녀(학생)가 교사의 면담 상황에서 공포심을 느꼈다’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은 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나 이를 우려하는 경우가 있어 생활지도 방식 자체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고민이 수반되며 혹시 문제가 될 경우 이를 소명해야 할 것을 선제적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음)
- ◆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국민신문고나 유선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로서는 이를 여러 번 소명하는 절차 자체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억울함이나 허망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 ◆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해당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행위 하였다는 것을 전달받는 자체에 불쾌함을 표하며 방어적이고 예민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안 처리와 별개로 교사가 보호자의 여러 감정적인 반응을 완충해야 하며 절차 처리 과정과 별개로 보호자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조하거나 공감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는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어 심각한 고충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음.
- ◆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자체에 대한 불만이 모욕이나 부당한 간섭, 악성 민원제기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여러 유형의 고충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를 통해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에 관한 내용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조항은 최종적으로 교사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적인 규정이며 제3항에서도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지도'라는 전제조건이 입증 되면 면책이 되는 것은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도출가능한 결론이라는 점에서 한 단계 더 세밀하게 구체적인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설치하고, 조사관을 배정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보충적인 역할이며 모든 사안의 인지 단계는 물론 학생들 간 갈등조정, 관계개선, 학생지도 등 생활지도는 교사를 통해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동일하기에 좀 더 실질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정비할 필요가 크다.

특히, 앞서 살핀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의 생활지도 및 인지과정에 있어 교원의 필수적인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면 위에서 살핀 모든 고충과 어려움이 전부 가중된다는 측면도 함께 살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시작으로 학교폭력 사안의 인지 및 처리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처분의 법률적 근거와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제도에 관한 규정들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특징이 있는데 실상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는 이 업무와 과정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수 많은 교사들이 관련 학생들과 보호자와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 상시적인 생활지도와 예방적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생활지도의 목적마저 전제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에서도 이를 보완하여 규정할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4. 기타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학교의 역할과 교원의 학생에 대한 역할이 지식의 전수라는 역할뿐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과 실제 교원들이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기대받는 역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관련 법률 전반적으로 교원의 본질적인 역할의 중요성과 책무를 규정하는 것에 비례하여 교원의 정당한 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규정들도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크다.

교권4법(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보완되면서 종전보다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규정이 보다 구

체화 되는 변화는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각 교육주체의 자발적인 절제와 협조가 전제되어 있는 정도<sup>5)</sup>라는 점에서 교원의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장이 가능한 규정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특별법으로서 법률 체계상 교육활동 보장에 가장 먼저 적용되는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도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모욕, 협박 등의 범죄행위에 준하는 수준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각종 보호조치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각종 교육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단계이나 이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자체를 보장하고 범죄행위 준하는 수준의 문제상황이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상시적인 고충들로부터 선제적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한다.<sup>6)</sup>

교원의 업무 특성 자체가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보더라도 그 특징이 현저히 구분되는 만큼 현재의 사회 현상과 문제점을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될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교원으로서 스스로 가져야 할 사명감과 교원, 학교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만으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고충과 문제점들로부터 교사들의 안전과 본질적인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바람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련 법률과 세부 규정들의 정비와 마련이 필요하다.

- 
- 5) 가장 대표적인 규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2. 27.)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22. 12. 27.]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라는 규정들이 존재하나 확인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들이며 실제 이러한 의무 이행등이 되지 않았을 때의 지원이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6) 최근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보강하면서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을 명시하기도 하였으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받기 위하여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각종 증거가 구비되지 않는 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 예측된다는 측면에서도 본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 [참 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시행 2024. 3. 28.]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 아동복지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05호, 2023. 8. 8., 일부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32호, 2023. 12. 26., 일부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42호, 2024. 1. 9.,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24호, 2024. 4. 23., 일부개정]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와 법 개정안 제안

이 장 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평생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 본 발제문에서 제안하는 법 개정안은 아직 교사노동조합연맹 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시안 성격의 필자 개인의 제안입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활발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현실성이 있고, 의미 있는 법 개정안이 완성되었으면 합니다.

---

### 〈차 례〉

- I. 2023년 교사 대투쟁 이후 학교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 36
- II.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법 개정안 제안 / 41
  - 1. 교사 본질업무 법제화 / 41
  - 2.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 47
  - 3.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 / 50
  - 4. 학교 민원창구시스템 법제화 / 56
    - 붙임.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 61
  - 5.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67
    - 붙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 76

## I. 2023년 교사 대투쟁 이후 학교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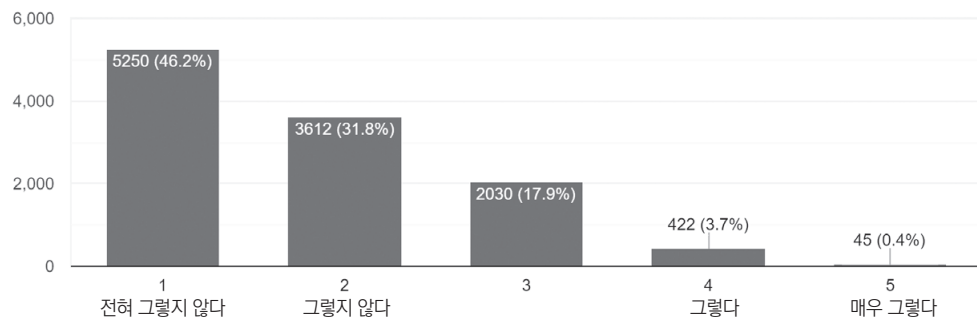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이 대투쟁으로, 공교육 정상화 및 교권 회복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 및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교권 4법으로 일컬어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었고 아동학대 처벌법도 개정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변화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교사 11,3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권4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여건이 좋아지고 있는냐는 질문에 긍정응답은 겨우 4.1%(그렇다 3.7%, 매우 그렇다 0.4%)에 그쳤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8%(전혀 그렇지 않다 46.2%, 그렇지 않다 31.8%)에 이르렀다.

5. 2023년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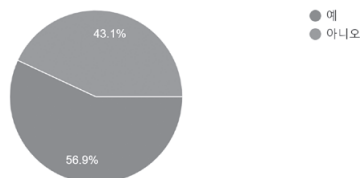
응답 11,359개



게다가 교권 침해 역시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 양상이다.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가 57%,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교사가 53.7%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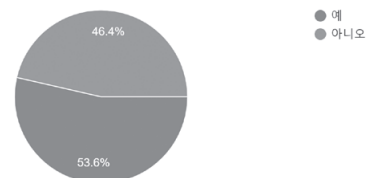
1. 최근 1년 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

응답 11,359개



2. 최근 1년 간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

응답 11,35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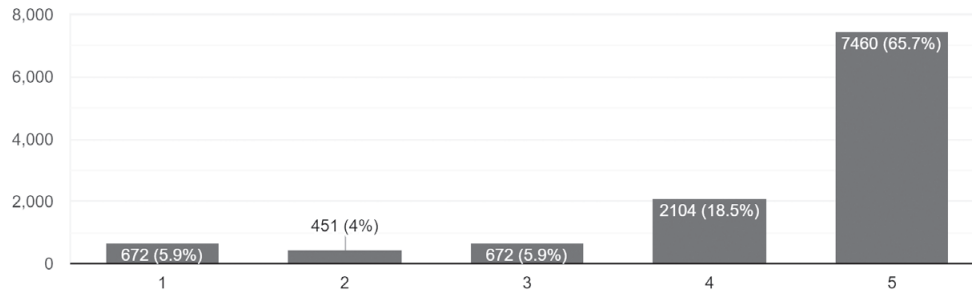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 교원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 것을 기대했지만, 이후에도 교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84.2%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

4. 최근 1년 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

응답 11,35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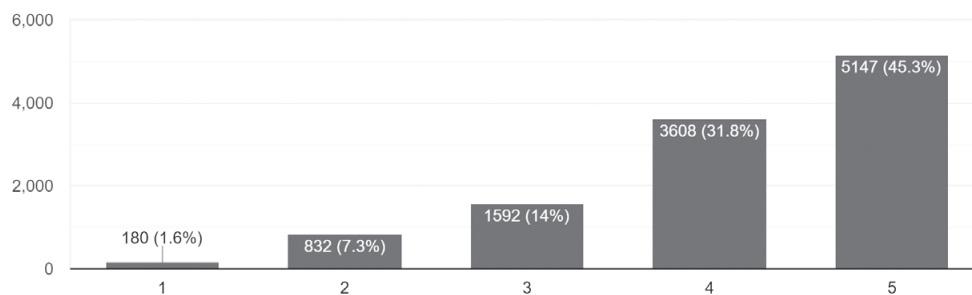


2023년 9월 1일,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시행되면서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제도가 제대로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분리의 방법과 절차를 학칙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학교장에게 위임했고, 학생 분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없어, 학생분리제도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교사가 77.1%(매우 그렇다 45.3%, 그렇다 31.8%)에 이르고 있고, 재학 중인 학교에서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겨우 12.6%(그렇다 10.4%, 매우 그렇다 2.2%)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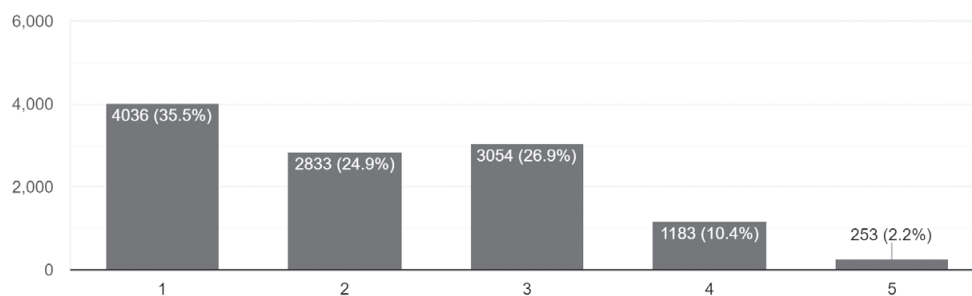
5.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응답 11,359개



6. 재학 중인 학교는 수업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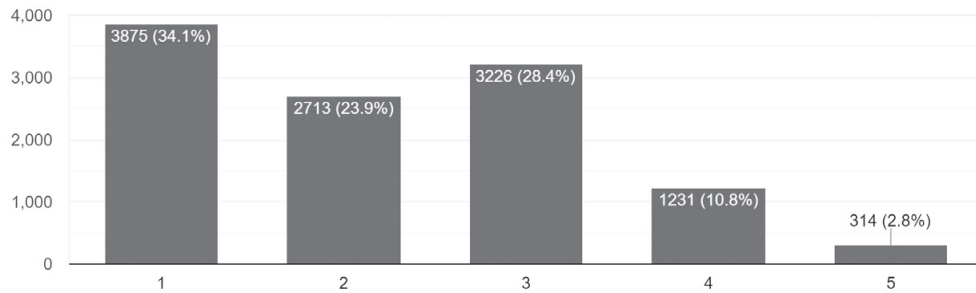
응답 11,359개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민원응대시스템 구축이 시작됐지만 시도교육청마다 지침이 다르고 개별 학교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연맹의 설문 결과 재학 중인 학교에 민원응대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의견이 58%(전혀 그렇지 않다 34.1%, 그렇지 않다 23.9%)에 이른다.

7. 재직 중인 학교는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

응답 11,35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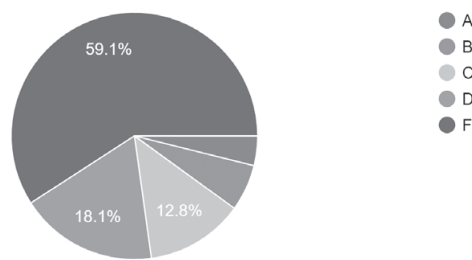


학교폭력업무가 교사 업무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겨우 학교폭력 조사업무만을 전담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되었지만, 조사업무 외의 업무는 여전히 교사의 몫이어서, 학교가 사소한 학생 간 다툼마저 사법적 처리를 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전하다.

교사들은 학교폭력전담관제에 대해서도 59.1%의 교사가 낙제 점수인 F학점을 주었다. D학점도 18.1%에 이른다.

2-4.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도입)

응답 11,359개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서이초 사태 이후 변한 것이 없다’, ‘가르치고 싶지만 가르치기 너무나 힘들다’는 교사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현장 교사들의 하소연을 받아 안아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자는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면서 ‘서이초 특별법 제정’을 제1호 공약을 내걸었다.

다음은 지난 4월 1일 발표된 백승아 당선자의 서이초 특별법 제정 공약 기자회견 발표문이다.

무너지가는 공교육을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실, 배움이 있는 교실을 돌려주기 위해 저는 ‘서이초 특별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이초 특별법’의 5가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사의 본질 업무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맡아 처리해야 할 일들이 교사 개인의 업무와 책임으로 넘어오면서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의 교사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고소·고발의 위험도 오롯이 교사 개인이 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선으로 맞추고, 행정 업무를 경감해서 아이 하나 하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각종 법률상의 책임을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나눠 갖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 분리 지도를 법제화하겠습니다.

2022년 이른바 ‘생활지도법’이라고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1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처음으로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 2023년 9월 공포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교육의 3주체를 ‘학생, 교원, 보호자’로 규정하고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예산이나 인력 지원 없이 분리 장소나 인력 등에 대한 책임을 개별 학교로 떠넘기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보려면 갈 길이 멍니다. 보호자 인계 가정학습 실시 등 보호자에 대한 책무성도 강화됐지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무용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량한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권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학생 분리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더 이상 교사 개인에게 악성민원을 감당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부가 2024년 2월 배포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는 교권과 관련한 법이 아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의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행정관료 대상의 법령과 매뉴얼에 근거한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가 교권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가 2023년 서이초를 비롯한 수많은 교사의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위한 별도의 민원 대응 관련 법과 그에 기반 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마땅합니다.

넷째,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명확화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서 교권 4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고소·고발의 남발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의 피해가 줄어들 것을 기대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아동학대 무고는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고성 신고로 인해 교사가 수사를 받고, 정당한 근거 없이 담임이 교체되며 교실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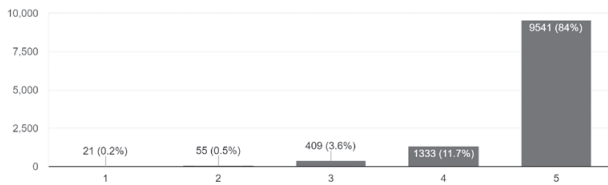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학교폭력업무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의 학교폭력예방법은 아무 권한도 없는 교사들에게 사안접수부터 조사 등 모든 과정을 책임 지워 이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예방효과는 미미하고 업무과중과 갈등을 유발하는 현재의 학교폭력예방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수업권 회복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그리고 궁극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 교사의 본질 업무 법제화, △ 학생분리제도 법제화, △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법제화, △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 학교폭력업무 전담 기관 법제화 등으로 구성된 서이초 특별법은 위 기자회견에서 보듯, 2023년 교사들이 그렇게 목 놓아 외쳤음에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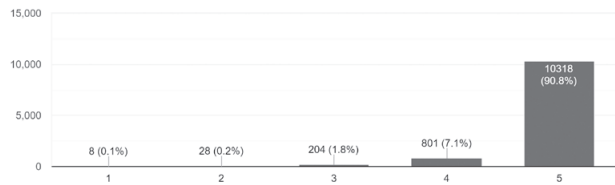
이러한 서이초 특별법에 대해 교사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교사 본질업무 법제화에 95.7%(적극 찬성 84%, 찬성 11.7%),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 법제화에 97.9%(적극 찬성 90.8%, 찬성 7.1%), 학교민원응대시스템 법제화에 98.1%(적극 찬성 91%, 찬성 7.1%), 학교폭력법 개정 내지 폐지에 94.2%(적극 찬성 82.8%, 찬성 11.4%)가 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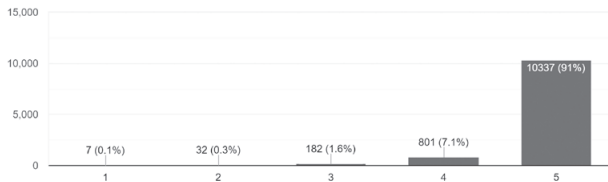
3. 교사의 본질업무 규정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응답 11,35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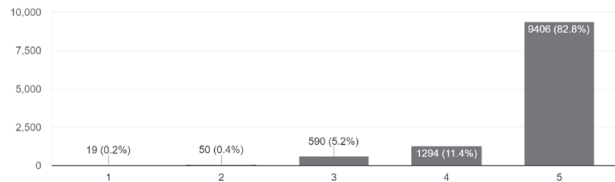
4.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  
응답 11,359개



5.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  
응답 11,359개



6.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  
응답 11,359개



교육활동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외적 환경에 의해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을 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다는 것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이 나라의 시대적 과제이며, 교사만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 II.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법 개정안 제안

필자는 오늘 ‘서이초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 것에 대해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며, 서이초 특별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을 드리 고자 한다.

참고로 본고는 서이초 특별법의 5가지 영역 중, △민원응대시스템 법제화와 △ 학교폭 력업무 전담기관 법제화는 내용이 복잡하여 편의상 뒤에 서술하고, △ 교사의 본질 업무 법제화, △ 학생분리제도 법제화, △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를 앞에 서술하였 음을 밝힌다.

### 1. 교사본질업무 법제화

#### 1) 필요성

2022년 한 교육신문에 교사노조들이 ‘교사본질업무 회복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sup>1)</sup>.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초등교사노조 등 교육계가 잇따라 ‘교사본질업무 회복 캠페인’ 참여를 선언하고 있다.

‘교사본질업무 회복 캠페인’은 현재 경기, 인천, 강원 등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지역노조와 전국유치원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 전국초등교사노조 등이 참여를 선언을 하며 전국적으로 캠페인이 확산 중이다.

이 캠페인은 교사가 각종 행정업무로부터 탈피해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숙고하고 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교사본질업무 회복 캠페인’은 모든 학교의 업무분장표를 학교의 고유 업무인 학생교육과 교사의 본질업무에 맞게 작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학교 업무분장표는 모든 교원에게 행정업무 중심으로 업무를 기술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러한 행정업무 중심의 업무분장이 아닌 교사의 ‘본질업무’ 중심의 업무 분장표로 업무 분장표를 새로 만들자는 캠페인이다.

‘교사의 본질업무’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 학습지도(수업) 및 교재 연구, 개인별 맞춤지도, 학생 및 학부모 상시 상담, 안전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이다.

---

1) 「『교사 본질업무 회복 캠페인』 전국 확산…교원단체, 잇따라 참여 선언」(2022.12.14. 교육플러스, 이지은 기자)

이 캠페인은 교사의 본질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교사가 비본질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교육부가 해마다 교원 업무경감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교사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일을 학교에 밀어 넣을 때마다 교사에게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고 있고, 학교의 업무를 두고, 교사의 업무인지 다른 직종의 업무인지에 대한 분쟁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의 본질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지 아니하면,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질 수 없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교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법에 딱 한 줄만 나와 있다.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유아교육법 제21조제4항)

교사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법으로 규정된 유일한 문구이다.

더 큰 문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교사의 직무인데,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헌법은 물론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돌봄도 교육이다”이라는 주장이 등장하는가 하면, ‘○○교육’라는 말을 붙여 그에 관한 업무를 학교와 교사에게 강요하는 현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적 용어로서의 ‘교육’과 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말하는 ‘교육’은 그 의미가 다르다. 가정교육, 예절교육, 신입사원교육, 간부교육, 판매자교육... 등등. 일상용어로서 교육은 우리의 생활현장 곳곳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이런 교육활동은 학교교육에 속하지 않는다. 학교교육에 속하는 사항은 헌법 제31조 제6항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9조 제4항<sup>2)</sup>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여 학교와 교사에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2)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런 점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한 줄을 넘어서서 교사가 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사가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늦었지만 매우 절실하고도 중요한 학교교육의 과제이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 2) 법 개정안

### ○ 주요 내용

-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별도 조항으로 ‘교사의 본연 업무 지원’ 조항 신설 (초·중등교육법의 경우 제20조의3)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에게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신설(제1항)
- 교사가 전념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함 (2항)
  1. 제9조에 따른 학생학업성취도 평가
  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3. 제2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4. 제24조에 따른 수업과 그 준비
  5.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6. 학급 운영 및 학생 상담
  7. 학생의 학습과 관련한 학부모와의 상담
  8. 제1호 내지 제7호를 위한 연구활동
  9. 그밖에 법령에서 교사의 업무로 정한 사항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과 본연의 업무 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책무를 규정함(제3항)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제4항)

### ○ 본연의 업무를 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명기한 이유

교사의 고유업무를 법제화 하려면 고유업무의 정의가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교사의 고유업무를 법으로 규정하려면 ‘교육’이 무엇인지 먼저 규정한 후, 이에 따라 교사의 고유업무를 규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 무엇인지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한 바, 법으로 ‘교육’의 정의를 규정하려 하면 많은 논란이 야기되어 사회적으로 합의된 안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법 개정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교육’이 무엇인지 법으로 정하려 하기보다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에 주목하여 교사의 업무를 법령으로 정해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교사의 고유 업무를 법령에 정해진 내용으로 정하는 것은 논란을 피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사의 고유 업무’ 법제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규정된 것들을 교사의 고유한 업무로 규정하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본질 업무로 생각하고 있는 ‘학급 운영,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연구활동’을 추가하여 교사의 본질업무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 더해 제9호로 “그밖에 법령에서 교사의 업무로 정한 사항”을 넣었는데 이는 다른 법령에서 교사의 업무로 정해진 사항을 빠뜨렸다는 반론을 피하면서, 향후 추가로 교사의 업무를 부과하려면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교사 업무 법정주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 ○ 법 개정안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 동일하게 개정	
현행법	개정안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현행)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현행)
(신설)	제20조의3(교사의 본연 업무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사가 그 본연의 업무인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교사가 전념해야 할 본연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제9조에 따른 학생학업성취도 평가 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3. 제2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4. 제24조에 따른 수업과 그 준비 5.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6. 학급 운영 및 학생 상담 7. 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부모와의 상담 8. 제1호 내지 제7호를 위한 연구활동 9. 그밖에 법령에서 교사의 업무로 정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사가 제2항에 따른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교사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 이외의 업무가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참고 : 교사의 업무 관련 초·중등교육법 상의 규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수업 등)

-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 10. 20.>
  - 1.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 ④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 제25조(학교생활기록)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1. 인적사항
  - 2. 학적사항
  - 3. 출결상황
  -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5. 교과학습 발달상황
  -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 2.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 1) 필요성

ADHD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는 그 학생 때문에 사실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다른 학생은 학습권을 침해받는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수업현장에서 분리하여 학교장이 지도하거나 학부모에게 인계하여 정상 수업을 보장하는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업방해학생 때문에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학생생활지도 법제화에 이어, 2023년부터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2023년 강민정 의원이 입법 발의한 수업방해학생 학생분리제도는 교육부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2023년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다음은 수업방해학생의 분리를 허용한 학생생활지도고시 관련 조항이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제12조(훈육)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 수업( 제6항)

⑦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⑩ 교원은 제6항 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고시를 통해 '학칙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허용된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교사노조연맹 설문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교사가 77%(매우 그렇다 45.3%, 그렇다 31.8%)에 이르고 있고, 재학 중인 학교에서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겨우 12.4%(그렇다 10.4%, 매우 그렇다 2.2%)에 불과했다.

실제로 학칙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허용된 학생분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공간과 지도인력이 필수불가결함에도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

학칙으로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리 공간 마련과 지도인력 확보를 학교 예산으로 해야 한다. 학교에 공간이 없거나 분리학생 지도인력이 없으면 시행 불가능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예산 인력 지원의 의무가 없다. 법으로 정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분리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예산지원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둘째,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 위헌이라는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해석되어 왔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반드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법률유보는 인권의 내용이나 그 보장의 방법 등의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의 규율유보,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한유보가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상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기본권보장원리에서 도출되는 원리이다.

이 법률유보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 교사가 고시에 따라 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누군가 위법, 위헌이라 제기할 경우 그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를 법으로 정해 위법,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 2) 법 개정안

### ○ 주요 내용

- 학생생활지도고시에 규정된 학생 분리 규정을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하고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초·중등교육법의 경우 제20조의2 제2항 신설)
- 학교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하루 2회 이상 분리하였음에도 계속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함(제3항 신설)
- 학생 분리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6호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제20조의2 제2항을 4항으로 하여 내용 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생분리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지원 의무를 부과함(제5항)
- 분리학생 지도를 위한 공간 마련과 지도인력 배치를 학교장의 의무로 함(제6항)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분리제도 운영 실태를 점점 지도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제7항)

### ○ 법 개정안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유아교육법 - 동일하게 개정	
현행법	개정안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신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을 해당 교육활동 공간에서 분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제2항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생의 분리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 분리가 적정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⑥ 학교의 장은 교원이 제2항에 따른 학생 분리를 적정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 분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지도 인력을 구비 배치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제2항에 따른 학생 분리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 조사 감독하고, 제4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p>
------	---

### 3.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

#### 1) 필요성

얼마 전 TV드라마에서 별거 중인 학부모가 아이를 뺏어오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이용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결정이 있게 됩니다. 양육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경우에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자녀 면접 교섭 과정에서 양측 간 마찰이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빈번한 분쟁 소재는 바로 아동학대 허위신고입니다.”<sup>3)</sup>

한 법무법인의 블로그에 기재된 글이다.

2023년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와 국회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입법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의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이 너무나 모호해 수업활동 중 훈계나 지시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좁혀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의 모호성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교사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넘어, 이혼 가정에서 양육권을 가진 아동의 친권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일반인이 아동의 부

3) 「양육권 변경분쟁 아동학대 허위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 블로그)



모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금의 법조문으로는 식당에서 부모가 소란을 피우는 아동을 훈계했을 때, 그 부모에 원한을 가진 사람이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부모를 괴롭힐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악용될 수 있는 것은 동 조항이 모호할뿐더러, 아동복지법과 연계된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소, 고발과 달리 무고죄도 성립하지 아니하며, 신고만 되면 무조건 조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의 악용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악용 소지가 많은 입법 내용은 악용에 의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사법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비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은 그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 2) 어떤 내용으로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것인가?

2023년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초·중등교육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일반법인 아동복지법에 특정 직종의 행위를 예외 조항으로 넣을 경우, 각종 직렬의 요구가 많아서 이를 수용하면 일반법 제정 취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입법화될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활동만을 예외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2024.2.7. 윤주경 의원 등 11인이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자는 취지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동안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아동학대 사건에 빈번히 인용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5.10.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윤주경 의원 등은 위 결정문 중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에 주목하여, 제17조 제5호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개정되면 이미 법원의 판례로 굳어진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가 법으로 명기되어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결정문에서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라고 말하고 있듯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가 어떤 기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이렇게 입법하는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얼마나 명확히 한 것인지는 특정하기가 어렵다.

위 헌재의 결정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이미 법원들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금지행위의 수준을 동력의 다른 호수들 즉 제3호의 ‘신체적 아동학대’와 제6호의 ‘유기 또는 방임’과 같은 수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하여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적시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은 판례로 굳어진 것을 조문화하는 의미는 크지만,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명확히 하여 이를 좁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위 헌재 결정문을 보면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라고 하여 이런 해석이 추상적임을 인정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고 하여, 결국 법관의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법관이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가해



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는 사건의 상황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은 어느 정도 기준을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필자는 어느 정도 일반화가 가능한 이 세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현재 결정문의 정신에 의거하여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 ①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 ②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 “일시적 혹은 일회적일지라도 그 정도가 심한”
- ③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윤리교육 등을 위한 훈계 행위 제외”
- ④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복성이나 지속성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은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①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을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은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인 행위라도 그 정도가 심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주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② “일시적 혹은 일회적일지라도 그 정도가 심한”을 구성요건으로 추가하였다.

③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와 관련하여 현재결정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한편, 정당한 훈육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그 의미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와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제17조 제3호 내지 제6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적어도 신체적 학대행위나 유기 또는 방임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이어야 할 것이므로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과는 구별된다.

현재의 이런 결정문에 입각할 때,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은 정서적 아동학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교육목적의 훈육 행위를 제외하도록 입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서적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훈육을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이라 할 때, ‘교육적 목적’이 무엇이나는 논란과 정상적인 훈육의 ‘정상적인’의 의미가 무엇이나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아동에 대한 훈계가 일어나는 일반적인 목적이 ‘예의와 사회규범을 교육’, 즉 윤리교육에 있으므로 ‘윤리교육 등을 위한 훈계 행위’를 제외하도록 하되, 훈계 행위를 모두 제외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훈계 행위로 한정하여 제17조 제5호에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윤리교육 등을 위한 훈계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④는 현재결정문에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법관의 판단과 “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는 바, 누구나 설득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간의 판례 등을 종합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 아동복지법 규정의 모호성에 대한 시비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신체적 아동학대와 유기 방임에 대해서도 그 세부 기준의 모호성이 존재하므로, 이 3가지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 3) 아동복지법 개정안

#### ○ 주요 내용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아동학대 앞에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일회적 또는 일시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하여”라는 제한 규정을 신설함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단서로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윤리교육 등을 위한 훈계행위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함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제5호(정서적 학대), 제6호(유기 또는 방임)의 학대 행위의 세부 기준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7조 제2항 신설)
- 아동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으로 확인된 국민의 권리 보호 조항을 신설(제28조 제2항 단서 신설)

○ 법 개정안 : 아동복지법 제17조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안	
아동복지법(현행)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5.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일시적 또는 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단,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윤리교육 등을 위한 훈계 행위는 제외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신설)	②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 기준은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삭제 <2020. 12. 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 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삭제 <2020. 12. 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 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 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

## 4. 학교 민원창구시스템 법제화

### 1) 필요성

2023년 교사대투쟁의 주요한 요구의 하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원장과 학교장에게 ‘민원처리의 책임’이 있음이 명기되고, 교원지위법에 학부모의 다음과 같은 행위가 교육활동 방해 행위로 규정(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되면서 해당 학부모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교육부는 지침으로 학교에서 학부모민원대응팀을 구성하여 학부모민원을 처리하도록 학교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교사노조연맹이 지난 4월 11,35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바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교에 민원응대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는 의견이 58%(전혀 그렇지 않다 34.1%, 그렇지 않다 23.9%)에 이른다.

이는 학부모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대응방법과 대응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유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의 민원처리 책임 규정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게 되었다.

행정기관의 민원에 대해서는 그 접수와 처리 절차 등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학교도 행정실 직원들이 각종 서류 등 민원 발급 업무 등은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학부모가 학생의 학습활동이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교사와 상담 및 면담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그 상담과 면담을 통해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이하 ‘학부모 상담민원’이라 함)은 민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 상담민원에 대해서는 접수와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정해진 규범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학부모 상담민원을 민원처리법을 적용하라 할 수는 없다. 민원 처리 원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교사를 민원처리자로 전락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 상담민원의 처리를 위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학교장과 교사가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학부모 상담민원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학교의 학부모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 관계도 명확해지고, 학부모 민원처리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감의 지원 책무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학부모상담민원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 2) 주요 내용

(1)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의 임무로 “학부모 상담 등의 민원은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학부모 상담민원의 처리 책임자가 학교장임을 명시함

(2) 민원처리법의 적용 범위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과 관련한 상담 등의 학부모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을 적용하기로 정한 사항에 한해 적용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학부모상담민원법에서 학부모의 상담민원 일부를 민원처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학부모상담민원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학부모 상담 민원의 신청, 접수, 접수창구단일화, 처리 절차, 결과통지 방법, 처리담당자, 상담민원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학교장, 민원처리담당자, 교사의 권리와 의무, 교육부장관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함.

### 3) 법 개정 및 제정안

#### (1)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 ○ 주요 내용

- 교장의 직무에 “학부모 상담 등의 민원은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단서 신설

##### ○ 법 개정안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유아교육법 - 동일하게 개정	
현행법	개정안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다만 학부모 상담 등의 민원은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단서 신설) 〈이하 좌동〉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

### ○ 주요 내용

- 적용 범위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과 관련한 상담 등의 학부 모 상담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을 적용하기로 정한 사항에 한해 적용한다.”는 단서 신설

### ○ 민원처리법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신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의 상담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을 적용하기로 정한 한 사항에 한해 적용한다.

## (3) 학부모 상담민원의 처리에 관한 법률(학부모상담민원법) 제정안

### ① 주요 내용

○ 명칭 : 「학부모 상담민원의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학부모상담민원법)」

○ 제1장 총칙

- 정의 : “학부모 상담민원”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과 관련한 상담, 면담 등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정의함(제2조)

- 제3조 적용범위

- 학부모 상담민원은 다른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
- 학부모민원이라도 내용이 민원처리법상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것은 민원처리법 적용

- 제4조 상담 민원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 학부모 권리와 금지행위 적시, 학부모가 금지행위 계속 시 교육활동침해행위로 간주하여 교육지원청의 장에서 제소



- 제5조 교직원과 교사의 권리와 의무 : 학교장, 민원처리담당자, 교사의 권리와 의무 규정, 학교장의 교사 보호 조치 의무 규정
- 제6조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의 원칙 : 민원창구에 일과시간 내 접수, 다른 통로의 민원 접수 처리 거부 가능, 교사에게 권한 밖의 민원처리 요구 금지, 학교장 명의 결과 통지
- 제7조 정보 보호 : 정보 누설 금지
- 제8조 학교의 학부모상담민원 처리 지원 : 교육부장관, 교육감의 민원처리 인력, 통합 접수시스템 구축, 녹음 시설 구비 등의 지원 의무 규정

## ○ 제2장 학부모민원의 처리

- 제1절 학부모 상담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 제9조(학부모 상담민원의 신청 및 신청 편의 제공) : 창구에 문서로 접수, 문서 접수 불가시 구술 전화로 접수 허용하되 녹음 녹화 의무화
  - 제10조(학부모 상담민원의 접수) : 온라인시스템 구축 시 그를 통한 민원 신청 허용
  - 제11조(학부모 상담민원 처리담당자의 지정) : 직원으로 업무담당자 지정
  - 제12조(학부모 상담민원의 이송) : 교육청이나 교육부 소관사항 등 이첩
- 제2절 학부모민원의 처리 방법 등
  - 제13조(학부모민원의 처리의 기간) : 접수 일부터 2일 이내 처리 절차 등 안내, 처리기간은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제14조(학부모민원 처리의 예외) :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 적시
- 제3절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 결과의 통지 등
  -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 처리 결과 문서 통보하되, 민원인이 원할 경우 구두, 문자 통보, 상담 민원은 상담 완료시 결과 통지 생략 가능

## ○ 제3장 학부모 상담민원 제도의 개선 등

- 제16조(학부모 상담민원 처리 제도개선 계획 등)
- 제17조(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제도의 개선 노력)
- 제18조(학부모민원의 실태조사 및 확인 평가)
- 제19조(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협조)
- 제20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 제21조(벌칙) : 비밀 누설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민원처리법의 규정)



②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붙임자료. 참조

■ 붙임. 학부모상담민원법 제정안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학부모상담민원법)(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아교육법 제21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학부모 상담 등 학부모 민원을 적법하고 교육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원 간 교육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권익을 함께 보호하여 학교교육의 정상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 상담민원”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과 관련한 상담, 면담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2. “일반민원”이란 제1항의 학부모 상담민원 외에 학교에 요청되는 각종 민원 일체를 말한다.
3. “상담민원 학부모”란 학부모상담민원을 제기하는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상담민원 처리 담당자”란 학부모 상담민원을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상담민원 학부모에게 통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6. “상담 응대 교사”란 학부모상담민원에 따라 상담민원학부모와 상담 또는 면담을 해야 하는 교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학부모 상담민원은 다른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다.
- ② 학부모민원이라도 그 내용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민원은 민원처리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4조(상담 민원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 ① 상담민원 학부모는 이 법에 따라 학부모 민원상담을 신청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교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상담민원 학부모는 학교장과 상담민원 처리 담당자 및 상담 응대 교사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이나 학칙을 위배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
  2. 학생의 학습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3.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조치를 교사에게 요구하는 행위

5. 기타 법령과 학칙에서 금지하는 행위

③ 학교의 장과 상담 응대 교사가 상담민원 학부모가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할 때 이 행위가 위법임을 고지하였음에도 동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할 때 동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침해행위로 본다.

④ 학교의 장과 상담 응대 교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하여 소속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알려 교원지위법 제18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조치를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직원과 교사의 권리와 의무)

① 학교의 장과 상담민원 처리 담당자 및 상담 응대 교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부모민원을 공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과 상담민원 처리 담당자 및 상담 응대 교사는 상담민원 학부모에게 이 법에 따라 학부모상담민원을 접수하고 법에 따른 절차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학부모상담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민원 응대 교사는 상담민원 학부모가 동일한 사안에 동일한 내용의 상담을 2회 이상 반복하였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상담요청을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때의 학부모 상담민원은 학교의 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민원학부모가 직접 교사에게 학부모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민원학부모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상담민원 요청 등으로부터 상담민원 처리 담당자와 상담 응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상담민원 처리 담당자와 상담 응대 교사는 학교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요구를 이유로 상담민원 처리 담당자와 상담 응대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학교의 장은 제3조제3항의 상황이 발생할 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해당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의 원칙)

① 학부모 상담민원은 학부모상담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결과 통지는 학교장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 상담민원의 내용에 따라 동 민원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동 민원을 처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이 때 학교장은 상담민원 처리 담당자로 하여금 민원 처리 의뢰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상담 응대 교사에게 동 교사의 권한 밖의 민원 처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부모민원은 학교의 일과 시간 내에 접수되고, 처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학부모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④ 학교의 장과 상담민원 처리 담당자와 상담 응대 교사는 제1항의 학부모상담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되지 아니하고, 다른 창구를 통해 요청된 학부모상담민원은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정보 보호) 학교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의 학부모상담민원 처리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부모민원을 이 법에 따라 적법하고 교육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학부모상담민원의 처리 인력 지원
  2. 학부모상담민원 통합 접수 시스템의 구축
  3. 학부모상담민원 요청 내용 녹화 녹음 시스템의 구축
  4. 학교장이 이첩한 학부모상담민원의 조속한 처리
  5. 기타 학부모상담민원의 교육적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제1항 제2호의 시스템을 구축할 때, 상담민원 학부모의 이 시스템 이용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원처리법을 준용한다.

## 제2장 학부모민원의 처리

### 제1절 학부모 상담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 제9조(학부모 상담민원의 신청 및 신청 편의 제공)

- ① 학부모 상담민원은 제5조제1항의 학부모상담민원창구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신청할 수 없는 학부모는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학부모 상담민원이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되는 경우 이를 접수하는 자은 이를 녹음 또는 녹화하여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민원인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학부모민원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민원 신청 전화를 개설 비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부모 상담민원 접수창구(민원실이 있을 경우 민원실)에 학부모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학부모 상담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담민원 학부모가 민원 처리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민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학부모 상담민원의 접수)

-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 상담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을 위배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의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 상담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상담민원 학부모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상담민원 학부모에게 신원확인예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인 경우 전자문서의 기록자에 대한 신분 확인으로, 전화 민원의 경우 신분을 확인하는 질문과 응답의 녹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상담민원 학부모가 제3항의 시스템이나 잔화 또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온라인 학부모 상담민원 접수창구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학부모 상담민원 처리담당자의 지정) 학교의 장은 학부모 상담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직원 중에 상담민원의 접수, 처리 절차 안내, 처리 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담당자는 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학부모 상담민원의 이송)

① 학부모 상담민원의 처리할 내용이 법령의 유권해석 또는 법령의 폐지 등 학교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항일 때, 학교의 장은 이 민원을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민원으로 보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 상담민원의 처리할 내용이 제1항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항인 경우 당해 학부모 상담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법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부모 상담민원을 타 기관에 이송하였을 때, 학교장은 이송 사실과 이송 이유를 상담민원을 신청한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부모 상담민원을 이송 받은 교육감, 교육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이송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 제2절 학부모민원의 처리 방법 등

#### 제13조(학부모민원의 처리의 기간)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 상담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 다음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 민원의 처리 절차(응대 담당자, 응대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안내를 상담민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학부모민원의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 학부모 상담민원에 따라 상담 응대 교사가 상담을 실시하는 절차와 방법, 그 기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과 상담 응대 교사는 제2항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 학부모 상담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학부모민원 처리의 예외) 학교의 장과 상담 응대 교사는 접수된 학부모 상담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사유를 해당 상담민원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상담민원
2. 제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상담민원
3.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상담민원
4.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교원 및 교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상담민원
5.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요구하는 상담민원
6. 법령상 학교의 장의 권한으로 처리할 수 없는 조치를 요구하는 상담민원
7. 학교장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권 및 평가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상담민원

### 제3절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 결과의 통지 등

####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 ① 학교의 장은 접수된 학부모 상담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상담민원 학부모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상담민원 학부모가 요청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상담민원이 교사 상담 및 면담 요청인 경우, 상담 및 면담이 완료된 경우, 상담민원 학부모가 상담민원의 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한 것이므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상담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 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민원의 처리결과를, 필요에 따라 또는 민원상담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상담민원 학부모에게 직접 교부할 때에는 교부 받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상담민원 학부모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장 학부모 상담민원 제도의 개선 등

#### 제16조(학부모 상담민원 처리 제도개선 계획 등)

-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부모 상담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7조(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제도의 개선 노력)

- ① 교육부장관은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상담민원 처리 담당자 및 상담 등대 교사는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게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8조(학부모민원의 실태조사 및 확인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교의 장이 관장하는 학부모 상담민원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의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가 이 법에 따라 교육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학교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여부와 학교의 장의 학부모 상담민원처리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상황을 확인·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결과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 제도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교육감과 학교자의 협조)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이 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학부모 상담민원 관련 자료수집과 관련 제도개선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0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교육부장관은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학부모 상담민원 처리제도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벌칙) 다음 제7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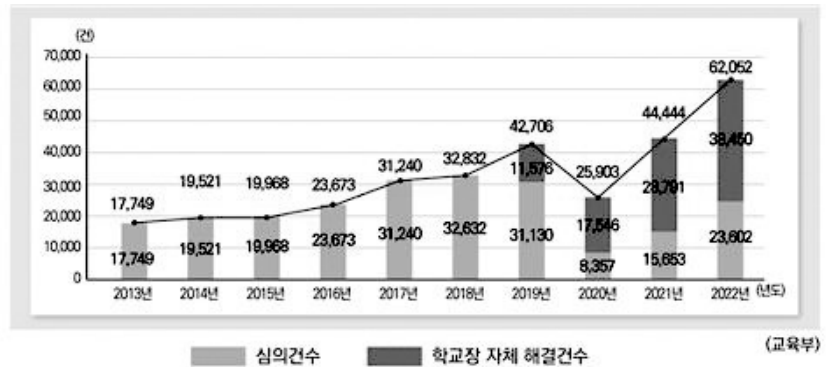
### 1)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

#### (1)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폭력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 학교 밖 청소년 포괄해야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대상 폭력에 대한 대응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 피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할 ‘청소년폭력’ 문제를 마치 학교의 책임인 양 국민의 인식을 오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말은 청소년폭력이란 말로 수정되어야 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은 청소년폭력 예방법으로 개칭되어,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에 대한 폭력 및 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까지 포괄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대상 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학교폭력예방법

소위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는 데에 비해 학교폭력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22년에는 6만2천 건이나 발생했고, 학교폭력위 심의수도 2만 3천 건에 이르렀다.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무기력하다는 반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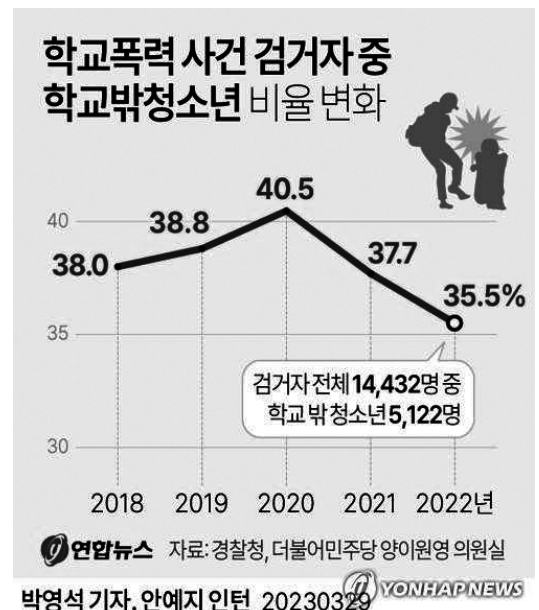


그런데 다음 통계를 보면 이 문제가 학교폭력에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경찰의 2022년 학교폭력 사건 검거자가 14,432명인데, 이중 학교 밖 청소년이 5,122명이다. 22년 학교폭력심의 건수가 23,602건인데, 경찰의 학교폭력사건 검거자 수가 14,432명이며, 그중 1/3 이상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학교폭력심의위 심의 사건의 1/2 이상은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가 함께 진행되며, 경찰에 신고된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의 상당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자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폭력을 당한 피



해학생에게는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

## ②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사건에만 적용되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청소년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7호 “청소년폭력·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국가는 청소년을 청소년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폭력으로 해당지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8호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악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청소년폭력으로부터 보호할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와 언론은 청소년폭력을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사용하면서, 청소년 폭력의 문제가 곧 학교의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 교육청도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폭력 문제를 해결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 국가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면서 ‘학교폭력’ 대책이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폭력 문제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 대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학교폭력예방법을 청소년폭력예방법으로 개칭하고, 학교 밖 청소년 폭력 예방책  
담아야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법’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수립할 국가의 책무를 가리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청소년폭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청소년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까지를 그 내용에 추가하여 담을 것을 제안한다.

성인의 아동에 대한 폭력은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이다. 성인이 청소년폭력의 가해자일 때, 청소년이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이다. 형법은 당연 적용대상이다.

학생의 학생에 대한 폭력은 학교폭력법 적용대상이다. 학생이 청소년폭력의 가해자일 때, 해당 청소년이 학생이면 당연히 학교폭력법 적용대상이다. 학생도 촉법소년이면 형법 적용대상이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폭력은 적용대상 법이 형법밖에 없다.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폭력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도, 가해자를 선도하는 법도 없다. 법의 공백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2022년 기준 국내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인구(6세-17세) 대비 비율은 약 3.0%로 17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반해 청소년 지원시설 이용자 수는 연간 약 13만 명 수준으로 학교 밖 청소년 4만여 명은 아무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앞의 경찰청 통계에서 봤듯, 학교폭력(청소년폭력) 사건 검거자 중 35%가 학교 밖 청소년이다. 3%의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폭력 사건의 35%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이, 우리 사회의 청소년폭력 예방 대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밖 청소년의 청소년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이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을 청소년폭력예방법으로 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폭력에 대한 대책을 법안에 추가해야 한다.

## (2) 경미한 사안의 교육적 해결조치 가로막고 있다 - 경미한 사안 교육적 처리 권한 부여 필요

### ① 과도하게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법 적용

학교폭력예방법은 그 적용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하다.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학생 간의 사소한 싸움이나 말다툼까지 아무 부담이 없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신고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학교폭력을 적용하여 처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비생산적인 업무처리가 수반된다.

### ② 경미한 사안도 교육적 처리 불가능

앞의 표에서 보듯이 2022년 62,052건이라는 어마어마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학교장 자체해결사건은 38,450건에 이른다. 60%가 넘는 사건이 학교장 자체 해결 사건으로 경미한 사건이다. 문제는 이 경미한 사건들의 처리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어, 교육적 처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17조에 따른 조치이거나,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장 자체 해결뿐이다. 그런데 제13조의2에 따른 자체 해결 시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동조 제3항<sup>4)</sup>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을 뿐이다.

학폭사안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원할 경우, 즉시분리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계부터 학생과 학부모는 감정이 상하게 되고, 교사는 조정을 해도, 하지 않아도 항의를 받게 된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는 위원회만 가동시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문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교사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조정에 따른 책임은 교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안조사 교사들이 등 많은 노력을 들였음에도 가해학생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못하고,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만 운영해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경미한 사안도 교육적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4)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③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에게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처리 권한 부여해야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동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0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1항에서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자체해결의 경우,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상 다른 규범을 어긴 학생은 ‘학교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생활지도를 받게 되지만, 그보다 중한 규범 위반자인 ‘경미한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학교폭력예방법 때문에 학교가 어떠한 교육적 지도도 징계도 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처리 권한을 부여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

### ④ 경미한 사안도 피해자나 그 학부모가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한 모순도 해결 필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7장 제6항은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조의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로,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이전의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그런데, 문제는 13조의2 제1항에 따라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고 학교장 자체 종결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도 학부모는 17조 제6항에 따라 가해자인 무거운 벌칙인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회의를 열어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모순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조치는 심의위 결정 조치까지의 한시적 결정이긴 하지만, 자체 종결 사안인 경우 심의위의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인지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도 없다.

이런 모순은 바로잡혀야 한다. 경미한 사건인 학교 자체 종결 사안에 대해, 사안 종결 시까지 필요에 따라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는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제1호에 따른 중대한 조치의 하나인 출석정지와 학급교체일 필요는 없다. 가정학습을 하게 하거나 생활지도고시에 따른 분리지도 정도로 하여 분리해도 충분하다. 이런 점에서 심의위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과 학교장 종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

의 사전 조치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 **(3) 권한 없는 교사·조사관에게 사안 조사를 강요하고 있다 - 조사권한 부여된 전담공무원제 도입 필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조사와 심의, 결정, 결정의 이행 절차가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리절차와 거의 같다. 그런데 사안조사를 담당하는 교사나 2023년에 도입된 전담조사관은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학교폭력예방법 어디에도 교사나 전담조사관에게 조사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없다. 때문에 사안조사는 협조적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받는 수준일 수밖에 없다. 가해자가 조사를 거부할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이 없고, 진술을 강요하거나 혼계를 하다가 가해자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받기 일쑤다. 조사권 없는 교사의 조사가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아동학대 신고, 고소 고발이 증가하자,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되었으나, 전담조사관 역시 조사권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아동복지법은 지자체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사안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학교폭력예방법은 담당 교사와 조사관에게 권한은 주지 않고 조사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급증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고 학교폭력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는 것처럼 교육지원청에도 학교폭력전담공무원(학생폭력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 **3)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 내 또는 교육활동 중 폭력사건’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게 주장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을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고, 학교에서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공간에서 일어난 사건까지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교사에게 그에 대한 조사와 사안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항변으로 제시된 대안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대안이 입법화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유는 학교 안과 밖으로 사건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기준으로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피해학생보호조치

를 취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같은 반인 A 학생에게 B학생은 학교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C학생은 학교를 좀 벗어난 곳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위와 같이 규정하면 B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아 A학생으로부터 분리조치라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C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A학생의 눈치를 보며 같은 학급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모순을 사회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또한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폭력 때문에도 위 분리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2023.3.24.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언어폭력’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경험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옆의 도표에서 보듯 사이버학교폭력은 급증하고 있어 2021년 피해학생의 비율이 31.6%에 이르렀다.

‘사이버 폭력’에서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있을까? ‘사이버 폭력’에서 ‘교육중의 활동’과 교육중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위 주장은 심정적으로는 공감되지만, 현실적으로 입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의견이라고 할 것이다.

## 2) 법 개정안

###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①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경미한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보장함

- 현행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는 학교장이 경미한 사안을 ‘자체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종결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체 종결 사안에서 가해자에게 학교의 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학교의 장은 가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모순이 있음.

- 이에 제13조의3(자체 해결 사안의 교육적 처리)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과함

- 학교 내 전담기구로 하여금 사안조사를 하게 함
- 전담기구의 조사가 곤란한 상황일 때 교육지원청 전담공무원에게 사안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함
- 자체해결 사안의 가해학생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지도하거나 징계할 수 있게 함.
- 자체해결 사안에 대한 지도나 징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보지 않도록 함(생기부 기재 등의 시비를 벗어나게 하려는 것임)

② 학교(학생)폭력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하고, 전담공무원에 조사권을 부여함

-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고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함
  -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담공무원 업무를 학생폭력 신고접수, 사안 조사, 심의위 자료 제공 등으로 구체화함
  - 대통령령으로 전담공무원의 업무 지원을 위한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함
  - 학교(생)폭력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자가 전담공무원의 협조 요청에 따르도록 함.
- 전담공무원에게 학교(생)폭력 조사권한을 부여함(제12조의3)
  - 학생폭력 신고 접수 시 피해사실 확인해 심의위 사안인지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인지 판단해 조치도록 함
  - 전담공무원에게 폭력 사안 관계자 조사 권한 부여
  - 조사 시 민간전문인력이 동행하게 할 수 있게 함
  - 조사 절차와 방법 규정
  - 전담공무원의 조사 방해 금지 규정
  - 전담공무원에게 학교전담경찰관 동행 요청권 부여
  - 전담공무원에게 학교 교사에게 조사 관련 업무지원 요청을 최소화할 의무 부여

③ 법의 명칭 변경,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 관련 대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 법의 명칭을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개칭(제목 및 제2조 개정)
  - “청소년폭력”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규정함
  - “청소년”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함
  - “학교폭력”이란 용어는 “학생폭력”으로 변경,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폭력 관련 사안은 학생폭력이라 명명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개정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함
  - 가해자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인 사건은 아동복지법에 따르도록 함(제5조 제3항



신설)

- 학교 밖 청소년이 가해자나 피해자인 경우, 그 관리를 국가와 지자체가 하도록 함  
(제5조 제4항 신설)
- 학교 밖 청소년의 선도활동과 보호활동의 시행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조 제5항 신설)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명칭을 ‘청소년폭력대책기구’로 변경(제6조의2, 7조, 9조, 10조, 10조의2)
-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명칭을 학생폭력대책심의위로 바꾸고 소위원회를 두어 사안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함(시군구의 아동복지심의위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준용한 것임, 제12조 제3항 신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에 ‘학교장에게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자체해결 의뢰’ 조항을 신설함(심의위가 자체종결 사안이라 판단해 학교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담공무원의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신설(제23조 제2항 신설)
- 전담공무원을 폭행, 협박 시 형사 처벌 조항 신설(제22조 제2항 신설)

## (2) 법 개정안 : 붙임 참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p>명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 학교폭력예방법)</p>	<p>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폭력예방법 )</p>
<p>제1조(목적) 이 법은 <b>학교폭력</b>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b>학생</b>의 보호, 가해<b>학생</b>의 선도·교육 및 피해<b>학생</b>과 가해<b>학생</b>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b>학생</b>의 인권을 보호하고 <b>학생</b>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u>청소년에 대한 폭력</u>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u>청소년</u>의 보호, 가해 <u>청소년</u>의 선도·교육 및 피해 <u>청소년</u>과 가해 <u>청소년</u>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u>청소년</u>의 인권을 보호하고 <u>청소년</u>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b>학교폭력</b>”이란 <b>학교</b> <b>내외에서</b> <b>학생</b>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청소년폭력</u>”이란 <u>청소년을 대상으로</u>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의2. “따돌림”이란 <b>학교</b> <b>내외에서</b> 2명 이상의 <b>학생</b>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b>학생</b>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p>	<p>1의2. “<u>청소년</u>”이란 2호에 따른 <u>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u>과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2호에 따른 ‘<u>학교 밖 청소년</u>’을 말한다.(신설)</p>
<p>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b>학생</b>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의3. “따돌림”이란 2명 이상의 <u>청소년</u>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u>청소년</u>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p>
<p>2. “<b>학교</b>”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p>	<p>1의4.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u>청소년</u>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가해<b>학생</b>”이란 가해자 중에서 <b>학교폭력</b>을 행</p>	<p>2.(좌동)</p> <p>2의2. “<u>학생폭력</u>”이란 <u>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한 청소년폭력</u>을 말한다.(신설)</p> <p>3. “<u>가해청소년</u>”이란 가해자 중에서 <u>청소년폭력</u>을 행사하거나 가담한 <u>청소년</u>을 말한다.(신설)</p>



<p>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p> <p>4. “피해학생”이란 <b>학교</b>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p> <p>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p>	<p><b>3의2</b>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b>청소년</b>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p> <p>4. “피해청소년”이란 <b>청소년</b>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말한다.</p> <p>4의2. “피해학생”이란 <b>청소년</b>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p> <p>5.(좌동)</p>
<p>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좌동)</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b>학교</b>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b>학교</b>폭력 예방활동과 <b>피해학생</b>의 보호 및 <b>가해학생</b>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b>청소년</b>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b>청소년</b>폭력 예방활동과 <b>피해청소년</b>의 보호 및 <b>가해청소년</b>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p> <p>③ (좌동)</p> <p>④ (좌동)</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p> <p>① <b>학교</b>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p> <p>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p> <p>① <b>청소년</b>폭력의 규제, 피해<b>청소년</b>의 보호 및 가해<b>청소년</b>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p> <p>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b>청소년</b>폭력의 가해자가 18세 이상인 경우,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다.(신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학교 밖 가해청소년을 선도하고, 피해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p> <p>⑤ 제4항에 따른 선도활동과 보호활동의 시행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p>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p>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p>

<p>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b>학교폭력</b>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b>학교폭력</b>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b>학교폭력대책위원회</b>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학교폭력</b>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li> <li>2. 피해<b>학생</b>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li> <li>3. <b>학교폭력</b>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li> <li>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li> <li>5. <b>학교폭력</b>의 예방과 피해<b>학생</b> 및 가해<b>학생</b>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li> <li>6. 그 밖에 <b>학교폭력</b>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b>학교폭력</b>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b>학교폭력</b> 사안처리 및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안내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p> <p>④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b>학교폭력</b>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b>청소년폭력</b>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b>청소년폭력</b>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b>청소년폭력대책위원회</b>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청소년폭력</b>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li> <li>2. 피해<b>청소년</b>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li> <li>3. <b>청소년폭력</b>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li> <li>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li> <li>5. <b>청소년폭력</b>의 예방과 피해<b>청소년</b> 및 가해<b>청소년</b>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li> <li>6. 그 밖에 <b>청소년폭력</b>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b>학생폭력</b>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b>학생폭력</b> 사안처리 및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안내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p> <p>④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b>학생폭력</b>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제6조의2(<b>학교폭력</b>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p> <p>① 국가는 <b>학생</b>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b>학교폭력</b>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b>학교폭력</b>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운영과 제2항에 따른 <b>학교폭력</b> 예방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의2(<b>청소년폭력</b>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p> <p>① 국가는 <b>청소년</b>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b>청소년폭력</b>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b>청소년폭력</b>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운영과 제2항에 따른 <b>청소년폭력</b> 예방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b>학교폭력</b>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b>학교폭력</b>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p>	<p>제7조(<b>청소년폭력</b>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b>청소년폭력</b>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p>

<p>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b>학교폭력대책위원회</b>(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학교폭력</b>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li> <li>2. <b>학교폭력</b>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li> <li>3. <b>학교폭력</b>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b>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b>, 제10조의2에 따른 <b>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b>, 제12조에 따른 <b>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b>,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li> </ol>	<p>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b>청소년폭력대책위원회</b>(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청소년폭력</b>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li> <li>2. <b>청소년폭력</b>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li> <li>3. <b>청소년폭력</b>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b>청소년폭력대책지역위원회</b>, 제10조의2에 따른 <b>청소년폭력대책지역협의회</b>, 제12조에 따른 <b>청소년폭력대책심의위원회</b>,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li> </ol>
<p>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li> <li>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b>학교폭력</b>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li> <li>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li> <li>2. <b>학교폭력</b>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li> <li>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li> <li>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b>학교폭력</b>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li> <li>5. 판사·검사·변호사</li> <li>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li> <li>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li> <li>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li> </ol> </li> <li>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li> </ol>	<p>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li> <li>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b>청소년폭력</b>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li> <li>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li> <li>2. <b>청소년폭력</b>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li> <li>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li> <li>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b>청소년폭력</b>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li> <li>5. 판사·검사·변호사</li> <li>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li> <li>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li> <li>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li> </ol> </li> <li>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li> </ol>

<p>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p> <p>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b>학교</b>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p> <p>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b>청소년</b>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b>학교</b>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p> <p>① 지역의 <b>학교</b>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b>학교</b>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b>청소년</b>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p> <p>① 지역의 <b>청소년</b>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b>청소년</b>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b>학교</b>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p> <p>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b>학교</b>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p> <p>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b>학교</b>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0조(<b>청소년</b>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p> <p>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b>청소년</b>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p> <p>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b>청소년</b>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0조의2(<b>학교</b>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p> <p>① <b>학교</b>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b>학교</b>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10조의2(<b>청소년</b>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p> <p>① <b>청소년</b>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b>청소년</b>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교육감의 임무)</p> <p>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b>학교</b>폭력의 예방·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b>학교</b>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b>학교</b>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b>학교</b>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b>학교</b>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b>학교</b>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⑧ 교육감은 <b>학교</b>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b>학교</b>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b>학교</b>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⑨ 교육감은 <b>학교</b>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⑩ 교육감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b>학교</b>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b>학교</b>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p>	<p>제11조(교육감의 임무)</p> <p>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b>학생</b>폭력의 예방·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b>학생</b>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b>학생</b>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b>학생</b>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b>학생</b>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b>학생</b>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⑧ 교육감은 <b>학생</b>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b>학생</b>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b>학생</b>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⑨ 교육감은 <b>학생</b>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⑩ 교육감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b>학생</b>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b>학생</b>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p>

<p>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⑫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b>학교</b>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p> <p>⑬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b>학교</b>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b>학교</b>폭력 실태조사,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⑫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b>학생</b>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p> <p>⑬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b>학생</b>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b>학생</b>폭력 실태조사,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의2(<b>학교</b>폭력 조사·상담 등)</p> <p>① 교육감은 <b>학교</b>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학교</b>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li> <li>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li> <li>3. <b>학교</b>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li> <li>4. 관할 구역 <b>학교</b>폭력서클 단속</li> <li>5. <b>학교</b>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li> <li>6. 그 밖에 <b>학교</b>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1조의2(<b>학생</b>폭력 조사·상담 등)</p> <p>① 교육감은 <b>학생</b>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학생</b>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li> <li>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li> <li>3. <b>학생</b>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li> <li>4. 관할 구역 <b>학생</b>폭력서클 단속</li> <li>5. <b>학생</b>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li> <li>6. 그 밖에 <b>학생</b>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p> <p>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b>학교</b>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p>	<p>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p> <p>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b>청소년</b>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p>



<p>· 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의4(<b>학교</b>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p> <p>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b>학교</b>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b>학교</b>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b>학교</b>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b>학교</b>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11조의4(<b>학생</b>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p> <p>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b>학생</b>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b>학생</b>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b>학생</b>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b>학생</b>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12조(<b>학교</b>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p> <p>① <b>학교</b>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b>학교</b>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 심의위원회는 <b>학교</b>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b>학교</b>폭력의 예방 및 대책</p>	<p>제12조(<b>학생</b>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p> <p>① <b>학생</b>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b>학생</b>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 심의위원회는 <b>학생</b>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b>학생</b>폭력의 예방 및 대책</p>

<p>2. 피해학생의 보호</p> <p>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p> <p>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b>학교폭력</b>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피해학생의 보호</p> <p>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p> <p>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u>심의위원회는 제2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소위원회 두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u></p> <p>④ <u>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b>학생폭력</b>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u></p> <p>⑤ <u>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12조의2(학생폭력전담공무원) (신설)</u></p> <p>① <u>학생폭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생폭력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u></p> <p>② <u>전담공무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으며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③ <u>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u></p> <p>1. <u>학생폭력 사안 신고접수</u></p> <p>2. <u>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상담 업무</u></p> <p>3. <u>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공</u></p> <p>4. <u>학생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위 결정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업무</u></p> <p>5. <u>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이 요청한 조사 협조</u></p> <p>6. <u>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폭력 관련 업무</u></p> <p>④ <u>교육감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u></p> <p>⑤ <u>학생폭력 관계 행정기관 및 학생폭력 관계자(가해학생, 피해학생 포함)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u></p>



	<p>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u>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p>
	<p>제12조의3(학생폭력 사안의 조사) (신설)</p> <p>① 학생폭력 신고를 접수한 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피해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1. 해당 학생폭력이 경미하여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에 해당할 때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 자체 해결하도록 조치</p> <p>2. 해당 학생폭력이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 사안조사를 실시하여 심의위에 관련 자료 제공</p> <p>② 전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 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피해학생, 가해학생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p> <p>③ 교육감은 전담공무원의 학생 폭력 사안조사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인력이 동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인력은 전담공무원의 입회하에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전담공무원 또는 민간전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전담공무원은 피해학생,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⑥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담공무원 또는 민간전문인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전담공무원은 학교폭력의 사안이 심각하여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0조의6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조사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학교전담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행하여야 한다.</p> <p>⑧ 전담조사관은 제1항 제2호 사안에 대한 조사활동에서 해당학교 교사의 조사 관련 업무 지원 요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p>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p> <p>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li> <li>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li> <li>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li> <li>4. <b>학교</b>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li> <li>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li> <li>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li> <li>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li> </ol> <p>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청소년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p> <p>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p> <p>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li> <li>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li> <li>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li> <li>4. <b>학생</b>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li> <li>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li> <li>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li> <li>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li> </ol> <p>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청소년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p> <p>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p> <p>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b>학교</b>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b>학교</b>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p> <p>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b>학생</b>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b>학생</b>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p> <p>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p> <p>3. <b>학교</b>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p> <p>4. <b>학교</b>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p>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p> <p>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p> <p>2. <b>학교</b>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p> <p>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b>학교</b>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b>학교</b>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p> <p>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p> <p>3. <b>학생</b>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p> <p>4. <b>학생</b>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p> <p><b>5. 보호자가 제17조 제6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b></p>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p> <p>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p> <p>2. <b>학생</b>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p> <p>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b>학생</b>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b>학생</b>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제13조의3(자체 해결 사안의 교육적 처리) (신설)</u></p> <p>① 학교의 장은 13조의2에 따른 자체해결 사안에 대해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로 하여금 사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사안조사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일 때 학교의 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전담공무원에게 사안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전담공무원은 사안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제1항 내지 2항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제13조의2에 따른 자체해결 사안의 가해학생을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도하거나 동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지도나 징계는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보지 아니한다.</p>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생**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생**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생**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2.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사안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⑤ 전담기구는 **학생**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생**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생**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구는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원할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생**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

<p>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p> <p>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p> <p>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p> <p>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⑤ 교육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⑦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학생폭력 예방교육 등)</p> <p>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생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학생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학생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생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⑤ 교육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생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교육부장관은 학생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⑦ 그 밖에 학생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p> <p>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p>	<p>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p> <p>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p>

<p>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li> <li>2. 일시보호</li> <li>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li> <li>4. 학급교체</li> <li>5. 삭제 &lt;2012. 3. 21.&gt;</li> <li>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ol> <p>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p> <p>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12. 3. 21.&gt;</li> <li>2. 삭제 &lt;2012. 3. 21.&gt;</li> </ol> <p>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p> <p>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li> <li>2. 일시보호</li> <li>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li> <li>4. 학급교체</li> <li>5. 삭제 &lt;2012. 3. 21.&gt;</li> <li>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ol> <p>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p> <p>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12. 3. 21.&gt;</li> <li>2. 삭제 &lt;2012. 3. 21.&gt;</li> </ol> <p>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p> <p>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p> <p>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b>학</b>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p> <p>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b>초·소년</b>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③ 심의위원회는 <b>학교</b>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애에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p>	<p>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③ 심의위원회는 <b>학생</b>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애에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p>
<p>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p> <p>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p> <p>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p> <p>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b>학생</b>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피해<b>학생</b>, 그 보호자 또는 피해<b>학생</b>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b>학생</b>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b>학생</b>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p> <p>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b>학생</b>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p> <p>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b>청소년</b>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피해<b>청소년</b>, 그 보호자 또는 피해<b>청소년</b>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b>청소년</b>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b>청소년</b>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p> <p>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b>청소년</b>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 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 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p> <p>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li> <li>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li> <li>3. 학교에서의 봉사</li> <li>4. 사회봉사</li> <li>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li> <li>6. 출석정지</li> <li>7. 학급교체</li> <li>8. 전학</li> <li>9. 퇴학처분</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p> <p>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b>학교</b>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p>	<p>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p> <p>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li> <li>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li> <li>3. 학교에서의 봉사</li> <li>4. 사회봉사</li> <li>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li> <li>6. 출석정지</li> <li>7. 학급교체</li> <li>8. 전학</li> <li>9. 퇴학처분</li> <li>10. <u>학교장에게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자체해결 의뢰(신설)</u></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p> <p>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b>학생</b>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p>

<p>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p> <p>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p> <p>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p> <p>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p> <p>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p> <p>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p>	<p>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p> <p>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각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1. <u>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u>,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p> <p>2. <u>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원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가정학습을 명하거나, 학교 내 피해학생과 분리지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p>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조치의 기간은 다음 각호의 범위 이내까지로 정할 수 있다.</p> <p>1. <u>제5항 및 제6항 제1호 따른 제1항제6호 조치는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시까지로 한다.</u></p> <p>2. <u>제6항 제2호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의3에 따른 자체해결 교육적 처리 방법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u></p> <p>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p> <p>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p> <p>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p>
---	---

<p>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 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p> <p>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 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p> <p>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의2(행정심판)</p> <p>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p> <p>⑤ 삭제 &lt;2019. 8. 20.&gt;</p> <p>⑥ 삭제 &lt;2019. 8. 20.&gt;</p>	<p>제17조의2(행정심판)</p> <p>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p> <p>⑤ 삭제 &lt;2019. 8. 20.&gt;</p> <p>⑥ 삭제 &lt;2019. 8. 20.&gt;</p>
<p>제17조의3(행정소송)</p> <p>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제17조의3(행정소송)</p> <p>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③ 교육장은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p>	<p>③ 교육장은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p>
<p>제17조의4(집행정지)</p> <p>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17조의4(집행정지)</p> <p>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17조의5(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제17조의5(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제18조(분쟁조정)</p> <p>① 심의위원회는 <b>학교</b>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p>	<p>제18조(분쟁조정)</p> <p>① 심의위원회는 <b>학생</b>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p>

<p>③ <b>학교</b>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p>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p> <p>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p> <p>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b>학생</b>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p>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p> <p>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p> <p>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p> <p>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b>학교</b>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b>학교</b>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b>학교</b>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b>학교</b>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b>학교</b>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b>학교</b>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p> <p>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b>학생</b>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b>학생</b>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b>학생</b>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b>학생</b>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b>학생</b>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b>학생</b>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0조(<b>학교</b>폭력의 신고의무)</p> <p>① <b>학교</b>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 <b>학생</b> 및 피해<b>학생</b>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0조(<b>청소년</b>폭력의 신고의무)</p> <p>① <b>청소년</b>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 <b>청소년</b> 및 피해<b>청소년</b>의 보호자와, <b>당해 청소년이 학생인 경우</b>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누구라도 <b>학교</b>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b>학교</b>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누구라도 <b>학생</b>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b>청소년</b>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b>학교</b>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b>청소년</b>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3 삭제 &lt;2023. 10. 24.&gt;</p> <p>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p> <p>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b>학교</b>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p> <p>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b>학교</b>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li> <li>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li> </ol> <p>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p> <p>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b>청소년</b>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p> <p>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b>학생</b>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li> <li>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li> </ol> <p>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p> <p>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b>학교</b>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2. 「청소년·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li> </ol>	<p>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p> <p>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b>학생</b>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2. 「청소년·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li> </ol>



<p>다른 청소년·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p> <p>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p> <p>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다른 청소년·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p> <p>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p> <p>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p> <p>① 국가는 <b>학교</b>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b>학교</b>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p> <p>① 국가는 <b>학생</b>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b>학생</b>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b>학교전담</b>경찰관을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b>학교</b>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p>	<p>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b>학생</b>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p>



<p>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p> <p>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p> <p>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p> <p>① 이 법에 따라 <b>학교</b>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b>학생</b>·피해<b>학생</b>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p>	<p>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p> <p>① 이 법에 따라 <b>청소년</b>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b>청소년</b>·피해<b>청소년</b>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p>
<p>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p>	<p>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p>
<p>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22조(벌칙)</p> <p>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b>제12조의3에 따른 전담공무원이나 민간전문인력,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b></p>

<p>제23조(과태료)</p> <p>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p>	<p><b>벌금에 처한다. (신설)</b></p> <p>제23조(과태료)</p> <p>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3 제2항 제3항에 따른 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의 조사를 거부한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u></p> <p>③ 제1항 <u>및 제2항에</u>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p>
	<p><b>부칙 (신설)</b></p> <p><u>제1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 다른 법령에 표기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청소년폭력예방법)’로 개정하고, ‘학교폭력’이란 용어는 ‘청소년폭력’으로 개정한다.</u></p>

---

# 토론

---



##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사의 직무수행 지원 필요성

김 혜 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교육은 “창조의 과업”(허병기, 1994: 54)으로서, 학생이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자 결과라면 어떤 과정을 거쳐 학생의 변화를 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정해진 답이 없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교육의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교사의 전문성 함양은 중요한 과제이자 교사의 의무가 된다. 반면, 학교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표준화 시도는 ‘허가된 자율성(licensed autonomy)’에서 ‘규제된 자율성(regulated autonomy)’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Apple, 2006). 교사가 자신의 직무수행 내용과 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제한된 여건은 교사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직무스트레스의 증가, 교사효능감의 저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교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교권 4법의 개정, 새롭게 제안된 서이초특별법과 이번 토론회에서 추가로 제안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 등은 대체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법제도 측면의 노력으로 이해된다. 그간 교사의 직무에 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기대한 홍보나 학교 내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토론을 통한 긍정적인 문화 형성에 초점을 두고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려는 논의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은 과거의 시도를 보완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이번 토론회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해되며, 발제자 두 분의 주장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점을 밝힌다. 교육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발제자 두 분이 제시한 세부 개정 사항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본 토론문에서는 다

소 이론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이기는 하나,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교사의 직무수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 1. 교사 전문성과 교권의 보장

교권의 개념은 관련 법령이나 판례, 학계의 논의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어 제시되거나 설명된 바를 찾기 어렵다. 학계의 복잡한 논의를 정리한 조우영(2023)의 논문에 따르면, 1980년대에 교권의 개념을 권위로서의 교권과 권리로서의 교권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후의 논의 역시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권리로서의 교권은 좁게는 수업할 권리에서 교사로서의 신분 및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 기본적인 권으로서의 권리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며, 권위로서의 교권은 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사회 구성원의 인정을 의미한다. 이때 교권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교육하거나 받을 권리인 교육권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학교에서 교육하도록 (국가 및 보호자로부터) 부여 받은(위임받은) 합법적인 권한과 교사로서의 신분 및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 그리고 교사가 가지는 전문적인 권위의 세 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사의 권한, 권리, 권위는 모두 교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다. 교사는 학생의 성장이라는 난해하고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전문적인 능력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에 관한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의 교육할 권한, 전문적인 권위,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신분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권리의 전제 조건이며, 교사의 권한, 권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때 전문성에 대한 존중 또한 높아진다. 교권 4법의 개정, 두 분의 발제자가 제안한 법령상의 미비점 및 개정안(본연 업무의 법제화,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등)은 모두 교사의 전문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구체화하여 규정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가령,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려는 방안이나 교사의 '본연 업무'를 평가, 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수업, 생활기록, 학급운영,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연구활동 등으로 규정하기 위한 입법화 시도는 모두 교사 전문성에 관한 법적인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은 교사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전문적 권위를 규정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전문성을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관한 물음이다.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매우 다양하며, 학생의 특성이나 교육과정, 학교의 여건 등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법령상에 직간접적으로 나타난 교사의 직무수행 내용은 학생 교육, 전문성 개발, 복무, 교원단체 참여, 인성 교육 및 진로교육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표 1〉 참고).

〈표 1〉 법령상의 교사 직무수행 내용

영역		세부 내용	관련 법규
학생 교육	교육 과정 및 수업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3항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 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 제3항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3항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의2
	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생활 지도 및 상담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지도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7조
	학생 자치 활동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전문성 개발	자질 함양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하게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
	연구, 연수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교원은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5항
복무	공무원은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66조
	직장이탈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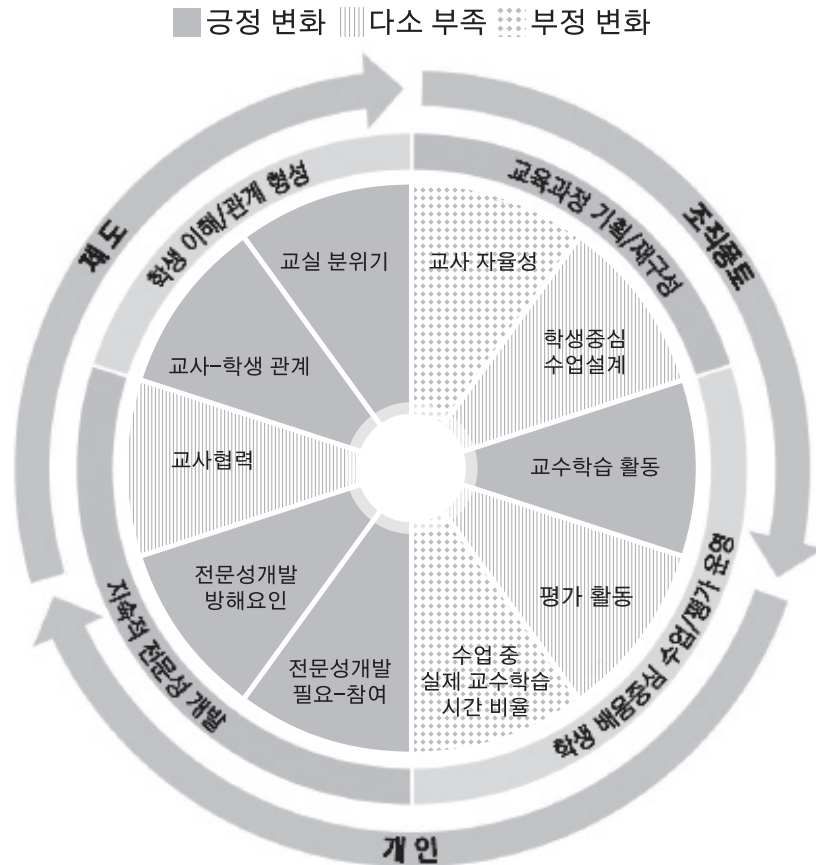
교원단체 참여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게 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
기타	인성 교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 대상의 나이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성교육법 제10조 제2항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동법 제10조 제3항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법 제10조 제4항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제17조
	진로 교육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둔다.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진로전담교사는 해당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진로교육법 제9조

\* 출처: 김혜진 외(2022)

또한 교사 전문성은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사회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요구, 사회 구성원이 갖는 교사 역할에 대한 요구,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직무의 변화 요구 등은 교사 전문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개념임을 보여준다. 학생의 배움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라는 방향성은 교사의 역할을 지식전달자가 아닌 학습 지원자, 안내자, 촉진자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과 직무 역시 변화할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법적인 시도가 자칫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한하여 교육의 문제를 교사의 문제로 치환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2000년대 초반 교실 붕괴, 잠자는 교실, 공교육의 위기를 지적하며 교사의 변화를 요구했던 시기에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교권 추락을 논의했었던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 2. 교사 직무수행 변화: 전문성의 확대와 자율성의 축소

2022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했던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 분석과 향후 과제’ 연구(김혜진 외, 2022)에 따르면, 교사는 사회 및 교육환경의 변화, 사회 구성원의 학교교육 및 교사 역할에 대한 요구, 교육정책의 변화 등에서 제기되는 요구에 따라 지난 10년간 변화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그림 1) 참고). 즉 직무수행의 각 영역에서 관찰된 변화는 직무에 제기되는 요구에 교사가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간 교사들은 교수학습 및 평가 활동을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수업에 적용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정도도 높은 편이었으며, 전문성 개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천하기에는 행정업무에 소요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동료 교사와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수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자율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즉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영역은 확대되고 있지만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 권한인 자율성은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렇다면 교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는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영역에 관한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권한을 행사함에 따른 결과에 교사 개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될 것이다. 두 발제자가 제안한 개정안이나 서이초특별법의 내용은 넓은 의미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부당하게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로 이해된다. 다만, 법령으로 보호할 사항과 정책으로 지원할 사항,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할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상위 법령에 명시하려는 시도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

울성을 저해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활동의 선택과 수행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교사의 결정을 신뢰하여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3. 배려의 윤리가 강조되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교권 4법의 개정을 통해 보장된 권리는 정책적인 지원, 동료 교원의 협력과 지원, 그리고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령을 구체화하여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여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오히려 제한되거나 ‘창조적 과업’으로 이해되는 교사의 직무수행이 소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사는 동일한 제도와 법령의 규정을 받는 한편, 각 학교는 구성원들의 활동, 사건, 감정 등에 의해 주관적으로 형성되어 서로 다른 현실 세계를 갖는다. 따라서 법령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사항과 학교 현실에 따라 교사가 전문성에 따라 자율적인 권한과 책무를 가져야 할 사항은 구분하여 그 권리와 권한, 권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회 구성원이 학교와 교사의 교육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책임의 윤리(the ethics of responsibility)를 강조한다면, 소극적인 대응과 회피, 소진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심, 친밀감을 갖고 심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관계 속에서 교사가 자신의 직무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배려의 윤리(the ethics of care)를 강조해야 할 시점이다.

#### 〈참고문헌〉

- 김혜진 외(2022).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 분석과 향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조우영(2023). ‘교권’의 해체 외 대체: 현행법상 개념 검토 및 재구성 제안. 교육법학연구, 35(3), 233-256.  
허병기(1994). 교직성격 고찰: 교직의 전문직성에 관한 반성적 논의. 교육학연구, 32, 49-77.

#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송 인 영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부회장

## 1. 학교는 변했다

작년 7월, 서이초 사건은 사회와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보여진 학교와 교실은 더 이상 우리가 학창시절에 겪었던 학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는 수업과 관련없는 각종 악성민원과 신고, 아동학대 고소 협박 등으로 더 이상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고 외쳤으며, 교육당국은 이에 대해 교사 개개인이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할때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였습니다. 학생과 수업,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할 교사가 본업(때로는 생명까지)을 내려놓을 만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자조적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식을 현저히 벗어난 억울한 민원과 갑질에도 교사는 무력했으며, 심지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인터넷을 도배한 장애학생의 폭력으로 다친 특수교사들의 사진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슴 아팠던 건 학생의 폭행을 방어하다 학생의 팔에 멍이라도 들면 신체적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기에 차라리 맞는게 낫다고 한 어느 선생님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이의 반에 수업시간에도 핸드폰을 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을 툭툭 때리고 다니는 학생이 한명 있는데, 어느날은 둘째가 그 아이에게 맞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속상해 하는 둘째에게 ‘선생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좋겠다’는 저의 말에, 돌아오는 대답은 ‘선생님도 할 수 있는게 없대요. 내가 못 피해서 맞은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피해야 해요.’라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학교가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 2. 교육공동체-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학교는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학교라는 제도 속에서 교육전문가로 양성된 교사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연령별로 필요한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이 곳은 단순 지식뿐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의 자질을 배우고 공동체적 의식을 키우며 한 인격체로서 성숙해가는 곳입니다.

내 자녀를 포함한 3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 교실의 모습을 상상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몇몇의 아이는 교실을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며 수업을 방해하고 있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머지 아이들의 무기력한 표정, 그리고 그 속에서 ‘그만해야지’라는 한 마디 후 칠판으로 고개를 돌려 억지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교사.

이 상황에서 교육공동체의 일환으로서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아이가 전자라면 다른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말 것과 선생님의 지도에 따를 것을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급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권리(학습권)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선생님의 지도를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는 것은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므로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도록 단단히 훈육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자라면 친구에게 수업에 집중할 것을 권유해보라는 말 외에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교실내 대부분의 학생이 후자일 것인데 학부모 입장에서 상대학생을 따로 불러서 수업에 방해하지 말라고 혼낼 수도 없고, 상대 부모에게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와 교사가 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봐선 바로 보복성 민원,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감수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전자의 학생을 두고 볼 수도, 후자의 학생이 무작정 학습권을 침해당한 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전자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후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에 맞는 지도와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 3. 모든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가. 문제학생 분리 지도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합니다. 학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녀가 규칙과 원칙이 지켜지고 정의가 있는 사회에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동체를 위협하고, 법과 규칙에 어긋난 행동이 옳지 않음을 알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 그리고 그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이 되는 안정된 사회에 살기 원합니다. 이는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통해 연습하고 습득해야 합니다.

작년 서이초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문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교육부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무조건 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생활지도 과정을 적용하고,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분리 지도가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리지도는 학생을 낙인하고 차별짓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지게 함으로 나아가 스스로를 성장케 할 수 있는 지도 과정이자 나머지 다수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물론 분리 지도과정에서 수업 결손이 일어나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단단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분리지도는 단순히 문제 학생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행동 학생의 반성을 이끌고 교실의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공동체 안의 규칙과 질서를 존중함으로 다수의 학생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급의 담임교사 한명이 이 두 그룹(분리지도 학생과 나머지 학생)을 동시에 지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세심하게 지도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교육당국은 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공간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분리지도 시 필요하다면 해당 학생에게 전문가(상담가, 치료사, 의사 등)와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문제행동 발생부터 분리 지도까지 학교별 표준시스템이 만들어져 전국 학교가 공통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 어느 지역이든 문제학생과 같은 반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질서 있는 교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 나. 학교 내 민원창구 단일화

매 학년초가 되면 학부모들도 고민이 커집니다. 이런 내용은 선생님께 여쭙봐도 되는 걸까, 이런 부분은 학부모로서 요구해도 되는 사항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발제자의 ‘학교 민원창구시스템 법제화’는 학부모 입장에서 반가웠습니다. 학교의 민원 처리 책임을 분명히 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과 관련한 상담 등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학부모가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일부 목소리 큰 학부모들의 민원에는 일괄된 답변이 나오도록 말입니다.

학부모 민원 또한 규칙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큰 학부모의 의견으로 학교가 흔들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업무가 늘어나고 왔다 갔다하는 안내로 인해 서로의 감정이 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사와 다수의 학부모 사이에 소통의 벽도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큼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묵묵히 학교를 믿고 자녀를 학교로 보내는 학부모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소리가 크든 작



든 학부모의 의견은 대등하게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학교를 방문하여 자기를 과시한다던가, 전화를 수시로 하여 교장과 교사들을 괴롭히거나 본인 자녀 중심의 민원 요구만 들어주는 학교를 바라지 않습니다. 원칙에 따라 민원이 접수되고 응답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민원 접수는 전화통화가 아닌 홈페이지, 어플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글을 쓰는 동안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의 민원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창구 응대 주체가 통일됐으면 합니다. 민원 대응을 학교에서 할 때 선생님과 관리자의 응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원칙대로 하는 선생님과 융통성 있는 선생님의 답변이 다르기도 합니다. 학교는 안된다고 하는데 교육청은 또 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민원 응답이 신뢰성 있는 공인된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창구의 형식과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이란 예의를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녀의 문제이다보니 아무래도 부모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학교를 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민원이 감정싸움이 되고 그것을 학부모들끼리 재공유하고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원을 넣기 위한 절차와 형식을 학교에서 잘 안내하여 절차와 형식에 합한 민원만 접수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학교 내 민원 처리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내 민원창구를 단일화한다면 오히려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4. 제도 개선을 통한 신뢰 회복

교육공동체의 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는 행복한 교육환경에서 학생과 교사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때론 함께 책임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교육당국은 공교육 정상화에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도가 탄탄하게 마련되어야 교육공동체간의 신뢰가 회복됩니다. 지금처럼 개개인이 피해를 보게 하는 학교구조로는 절대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잘 배울 수 있고, 교사는 잘 가르칠 수 있고, 학부모는 내 자녀와 교사를 신뢰하며 교육활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제도와 법개정이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의 필요성 - 초등교사노조 사례를 중심으로 -

윤 미 숙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교사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 1.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법 개정안에 “공감”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와 법 개정안 제안]에서 교사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교육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 나라의 시대적 과제이며, 서이초 특별법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를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제안된 5가지 입법 주제인 △교사 본질업무 법제화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 △학교 민원창구시스템 법제화 △학 교폭력예방법 개정은 현장교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는 초등교사노조 실무진의 입장에서 보기에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반영된 입법안 이라고 판단된다.

발제자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 주제와 관련하여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다룬 법원·헌법 재판소의 결정문을 통해,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의 기준을 일반화하는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일시적 또는 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하여’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윤리교육 등을 위한 훈계 행위는 제외’를 단서 조항으로 두고,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아동복지법 제28조 2호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 마련’하라는 책무를 추가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위 발제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초등교사노조에서 다루었던 [교사들을 향한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규정 적용]과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 왜 정서적 아

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가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등교사노조의 활동

### 1) 정서적 아동학대 악용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침해에 대한 대응 활동

#### ■ 왕의 DNA사건,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와 교사 직위해제 뒤에 밝혀진 교육활동침해

[22.10~11] 교육부 공무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해당 교사 직위 해제)

[23.5~6] 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해당 교사 복직)

[23.8.10] 초등교사노조의 제보로 교육부 공무원이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후임 담임에게 ‘왕의 DNA 문건’을 보낸 것이 언론에 보도됨

[23.8] ‘왕의 DNA 문건’ 작성 교육부 공무원,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담임교사에  
게 사과, 교육부 중징계 의결

[24.1.30] 초등교사노조, ‘왕의 DNA 문건 작성 교육부 공무원 엄벌요청’ 2500명 탄  
원서, 세종남부경찰서에 제출

[24.3.15]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건’ 작성 교육부 공무원 고발장 제출, 초등교사  
노조 엄정한 수사 촉구

▶ 교사의 교육적 지도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 교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사를 정서  
적 아동학대 금지 조항 위반으로 신고를 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담임교사 교체로 인한  
피해는 남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초등교사노조는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고  
피해 선생님이 건강하게 교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해당 공무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아동의 피해’보다는 ‘학부모의 주관’에 따  
라 결정되고, 그로 인해 교육과정이 파행되고, 해당 교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  
겼다.

#### ■ 광주 A초,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2심 넘어 재정신청까지 시달린 뒤 교육활동침해 인정

[22.4.12] 학생들 다툼을 말리기 위해 학생들 없는 빈 공간으로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  
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함

[23.4월] 광주지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해당 학부모는 항고함

[23.7.26] 광주고검, 항고 기각, 해당 학부모는 재정 신청함

[23.10.24] 초등교사노조, A초 선생님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에 맞춰 교권회복 지지

서명(8,000명 참여) 전달 및 교권회복 촉구 시위 실시

[23.10.26] 광주고법, 가해 학부모의 재정 신청 기각

[23.10.27] 가해 학부모 교권 침해 인정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보

▶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3300만원의 민사소송도 제기한 사건이다. 해당 교사의 행동을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이어갔다. 법률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학부모의 악의적인 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만들려는 지속적인 법적 처벌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이다.

#### ■ 광주A초,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2심 넘어 재정신청까지 시달린 뒤 교육활동침해 인정 사례

[22.4.12] 학생들 다툼을 말리기 위해 학생들 없는 빈 공간으로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함

[23.4월] 광주지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해당 학부모는 항고함

[23.7.26] 광주고검, 항고 기각, 해당 학부모는 재정 신청함

[23.10.24] 초등교사노조, A초 선생님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에 맞춰 교권회복 지지서명(8,000명 참여) 전달 및 교권회복 촉구 시위 실시

[23.10.26] 광주고법, 가해 학부모의 재정 신청 기각

[23.10.27] 가해 학부모 교권 침해 인정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보

▶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3300만원의 민사소송도 제기한 사건이다. 해당 교사의 행동을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이어갔다. 법률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학부모의 악의적인 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만들려는 지속적인 법적 처벌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이다.

#### ■ 특수교사, 불법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며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 판결 사례

[24.1.16]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0개월 구형받은 특수교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연명 수합

[24.2.1] 몰래녹음에 기반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규탄하는 언론대응, ‘교사 괴롭힘 악법 언제까지’

[24.2.2] 불법녹음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 판결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에 연대 참여

[24.2.3] 항소 진행 및 언론 대응 연대

▶ 초등교사노조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의 불법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사법당국의 유죄인정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최종 무혐의 판결까지 피해교사와 함께 할 예정이다. ‘불법녹음’, ‘정서적 아동학대 무고’ 모두 교사를 향한 형법적 범죄이며, 교사를 향한 범죄 행위 및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끊어내는 일에 온 사회적 노력이 일어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 현장이 바로 서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교사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 ■ 김해B초, 교사의 교육활동보호 요구에 학부모는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로 방해

[24.1.25] 학생들의 잘못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자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함. 선생님을 위한 기자회견과 침묵시위

[24.1.26] 심각한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아동학대범이 된 교사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교권침해 인정)를 환영하며, 후속대응 연대를 알리는 언론대응

[24.2.16] 교권침해 피해교사,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피신고, 사안 종결을 요청하는 탄원서 연명 수합하여 제출

[24.5.2]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검찰 송치

▶ 김해의 피해교사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교권보호위원회 요청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학생들의 추가 교권 침해 정황을 발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 측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할 의사 있음을 흘리기, 신고하지 않겠다며 회유하기, 결국 신고를 강행하는 순으로 행동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검찰의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피해교사와 함께 대응할 예정이다. 이 사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조항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괴롭히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용도로 어떻게 악용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 정서적 아동학대 아동학대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 제기 활동

[23.8.10] 정서적 아동학대 제17조 5호의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 위헌소송 청구인 모집

[23.8.18] 헌법소원 기자회견 및 헌법소원 청구

[23.9.1] 청구인 자격 문제로 헌법소원 각하 및 위헌소송 청구인 재모집

[24.2.19] 새로운 청구인 섭외 및 사건 검토

[24.5.9] 새 청구인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제출

▶ 초등교사노조는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규정의 악용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돕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헌법소원과 입법 운동을 시작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서적 학대가 단순 의심만으로도 교사를 고소하는 소송전의 무기로 사용됨을 지적하고, 이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위반하기에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의 합헌 결정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률의 명확성에 다소 반하는 점은 판례로 보완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오히려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판결해 왔다. 일례로, 교사가 “프린트물을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D이다.”라고 말하거나, 수업에서 사용할 선물 뽑기를 만들면서 “꽈”에 해당하는 뽑기에 “D”라고 기재한 행위(창원지방법원 2023.4.27.선고 2023고단90판결)조차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하여 형벌을 가해 왔다.

초등교사노조는 학대 목적 없는 훈육행위나 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 조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규정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넓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 특히 ‘정신건강’, ‘발달’, ‘정서적’ 등의 표현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금지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기준으로 금지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행위 책임의 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조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며, 교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로서 훈육권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볼 수 있다. 더불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닌 행위까지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비례원칙 내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로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인 교육권 보장이라

는 공익이 침해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2023년 초등교사노조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자격 문제를 들어 ‘검찰 수사 중인 사정만으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로 인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하였다. 이는 곧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 신고 받고 조사받는 과정이 그렇게 괴로운 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초등교사노조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서적 학대로 오인 받는 것은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며 헌법 정신에 위배됨을 실제 사례로 명백히 확인한 바에 있다. 이에 5월 9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내면서 새로운 헌법소원을 시작한다. 재판관들이 교사의 기본권과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현 상황을 위해 현명한 판결을 내리는 순간까지 초교조의 헌법소원은 계속될 것이다.

### 3)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운동

[23.9.11] 입법 개정 운동 시작, 개정 법안 탐색 작업

[23.9~11] 입법 개정을 위한 조합원 의견 국회 전달

[23.11.08] 아동복지법 개정 관련 보건복지부 간담회 참여

[23.11~12] 양당 정책위 의장,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의원실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

▶ 초등교사노조는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입법 개정 의견을 여러 의원에게 전하고 입법을 촉구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정부의 개정안을 기다리거나 찬반의견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입법형식을 통해 신속하게 개정안을 상정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 본회의 투표를 시도하는 것이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건의하여 입법 발의되었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정의 규정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가 개정 반영되는데 힘을 보탰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조항의 명확화와 현 아동학대행위자 기록 시 국민 권익이 침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실 방문, 관계 부처 간담회 진행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22대 국회 임기의 시작과 함께 교권 5법 후속 법안을 비롯하여 아동복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서이초 특별법 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 3.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법 개정을 기대하며

초등교사노조에서 헌법소원을 진행하며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로 인해 고통받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경기도의 초등교사 C씨는 학교폭력 담당교사로 가해 학생을 조사하던 교사는 조사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취조했다’며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경남의 D교사는 급식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학생에게 ‘교실에 있어도 된다’라고 했다가 학생 급식지도 소홀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도 있다. 충북의 E교사는 모둠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교사 책상 옆에 앉히고 나서 학부모에게 ‘우리 아이를 따돌렸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이들 모두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과를 받기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불안 및 우울장애’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초등교사노조에서 다뤄왔던 교권침해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를 위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의 명확화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은 모호성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 교사와 다른 학생, 학부모는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의 반복성, 기간, 심각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어진 여러 교사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두고도 아동복지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여전히 교사들은 보복성, 위협성, 면피성 아동학대 무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다시, 7월이 돌아온다. 뜨거운 여름 아동복지법 개정을 목놓아 부르짖던 교사들의 열망이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서이초 특별법 제정으로 교실을 바로 세울 수 있길 바라본다.



## 교실 및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과제 - 학폭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

홍 민 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최근 2024. 1. 9. 대폭개정이 되었고 2024. 3.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학폭법은 ▲가해학생 엄정 대응 ▲피해학생 보호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의 이유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여전히 학교현장에 갈등은 심화되고 있고 학교는 갈등 해결의 교육적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의 한계 및 그 대안을 제안하고 학교와 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와 법 개정안 제안 발제문’에서는 1)학교밖 청소년의 포괄 2)경미한 사안의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학교장에게 가해학생 조치 명시, 피해자가 요청하는 6,7호 조치 삭제, 3) 조사관제에서 전담공무원제로 전환 등을 제안하였고 ‘교실 및 교육공동체 회복을 저해하는 현행법의 미비점’ 발제문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발제문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의견 및 새롭게 제안하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1. 조사관 제도

조사관 제도는 교원의 격무를 덜면서 전문적인 사안조사와 해결이 가능할거라 기대하며 도입되었으나 여러 우려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안처리의 지연입니다. 교육청 소속의 조사관이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로 이동하여 사안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보니 사안처리가 지연되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조사관과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학교의 학폭 담당교사는 학폭 조사관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고 연결이 된다고 해도 현재 조사관이 바로 학교에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사안마다 조사관이 바뀌기 때문에 업무 지연 및 라포 형성이 어렵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특정 학교 담당 조사관이 정해져 있어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바로 학폭 담당 교사와 소통하고 사안 종료까지 긴밀하게 협업하는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학교 사안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성인과는 달리 발달단계에 따라 매우 독특한 행동양상을 보입니다. 실제 학폭 사례를 보면 청소년기 학생들의 관계맺는 방식의 특성이나 또래 문화가 복합하게 얹혀 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 상태 및 행동 양상을 아울러 사안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역량에 대한 검증이나 연수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제 학생들이 조사과정에서 위축되거나 불안해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sup>1)</sup> 발제문에서는 전담공무원제 실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이해 및 조사 전문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학부모나 학생이 조사관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신고 당해 가해자가 되는 순간 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폭사안 처리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는 대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조사관 투입 이후, 조사관의 사건보고서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에 학생 학부모는 조사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모든 문건을 접수하고 조사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은 반드시 학폭 담당 선생님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부담이 생기고 선생님은 예민한 과정에서의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교실 및 교육공동체 회복을 저해하는 현행법의 미비점’ 발제문에서 열거된 사례와 같은 고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조사관의 효율적 조사,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고충 완화, 가피해 학생의 권리 보장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업무를 조사관이 전담하는 것으로 정했다면 필요한 절차 또한 조사관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 우리가 현실로...학폭 조사관제 불만에 전북교육청 개선책 ‘고민’, 연합뉴스, 2024-03-29

## 2. 경미한 사안의 처리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가 교육적 책무성과 권한을 가지고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발제문에서도 해당 내용이 제안되어 있고 자체 해결 시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는데 크게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요즘 학폭신고가 또 하나의 학폭이 되는 양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요건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3. 10. 24.>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문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조건 교육지원청의 학폭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사건화 되는 경우의 수 중 일방적인 따돌림이나 다수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공격하는 집단 폭행도 있지만 쌍방의 잘못이 쌓이다가 관계가 틀어지거나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 폭력사태로 번지게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한 쪽이 피해자로 학폭을 신고하게 되면 상대방 또한 일방적으로 가해자 위치에서 판단받는데 억울함이 크기 때문에 맞폭 신고를 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러운 방어책이 되어버립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증폭되며 화해나 사과보다는 응보와 방어 공격이 학교폭력 사안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피해자 동의 요건을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거나 전학 등의 과도한 조치를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짜려보았다’, ‘겁을 주었다’, ‘손을 잡아당겼다’, 등의 이유로 학폭 신고가 되고 화해를 시도하였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 결국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교육청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학부모를 보며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느낍니다. 사안의 경미성 조건을 다소 엄격하게 재정의하더라도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학교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연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3. 초등 1학년 학폭심의위 절차 적용 재검토

우리 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에 너무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는 존재이지 변신하는 존재가 아닌데 만6~7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한 전환을 강요합니다. 유치원에서는 놀이 중심교육과정으로 놀이와 활동위주로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1교시 40분, 10분 쉬는 시간을 엄수해야 하고 그밖에 학습하는 존재로서 규칙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신 요구는 학습영역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학년들과 같은 조항들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어리다고 모든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소년법 또한 만10세 미만은 처분하지 못합니다.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학폭 심의위원회 처분을 유예하고 학교장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 심각한 성관련 사안 및 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학폭 심의위 처분을 받게 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 4. 방어권 보장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처분은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학생이라면 인생을 걸고 방어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학생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과정과 절차에서 가해학생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되었는지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어느 날 누구와 어떤 행위를 했길래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는지 알아야 초기 조사단계에서부터 부인을 하든 항변을 하든 인정을 하든 할 수 있을 텐데 제대로 된 피해 사실 확인없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경찰단계 수사에서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서장의 고소장 비공개결정은 피의자와 변호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전원재판부 2000헌마474, 2003. 3. 27)결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학폭심의 절차는 형사절차와는 구별되는 행정적 교육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심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학생에게는 형사처벌과 비견될 수 있는 침익적 처분이기에 그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피해자 확인서 열람복사권 및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폭심의위 처리 절차에서 할 수 있는 주장과 입증을 다 하고 이에 적합한 처분이 나왔다고 판단할 때 심의위의 처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5. 전국적으로 일관된 적용이 필요한 사항의 통일

학폭 사안을 진행하면서 놀랐던 부분은 교육청마다 다르게 진행되는 사안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피해 사실을 반박하거나 가해 사실을 증명하는 문건을 정리해서 제출하더라도 지역교육청의 학폭심의위원회에서 미리 해당 문건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었습니다. 서면을 정리하다 보면 문건의 양이 많아집니다. 이 문건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으려면 심의위가 개최되는 제한된 시간에 열람하기 보다는 미리 심의 위원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것인데 알아본 바로는 교육청마다 심의위원들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달리 정해야 할 것이 아닌 경우 즉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법률로써 이를 일관되게 규율해야 합니다. 학폭심의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가해자의 반성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 및 실체적 정의 두 가치를 모두 추구해야 하고 이는 지역별로 달리 볼 사안이 아닙니다. 적어도 학폭 사안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 통일이 가능하도록 법률 및 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 행정소송 등 다른 차원에서의 갈등의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6. 무고한 학폭 신고에도 무조건적으로 취해지는 분리조치

맞폭과 학폭신고가 학폭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학폭신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현행 학폭법에 의하면 무조건적인 분리 조치가 7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법리적으로도 당사자가 행정처분을 바로 결정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무고하게 신고되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이 조치로 인해 학습권 및 교육권에 현저한 제한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무고 및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서도 바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학생에 대해 가혹한 조치이고 이 조치로 인해 가피해자 학생 및 학부모의 갈등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리조치에 대해 학교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 및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분리조치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7. 처분 사안에 대한 플랫폼 필요

사법적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플랫폼을 만들어 판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폭 관련 행정소송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의 내용이나 처분결과의 위법성 유무 및 그 이유에 대한 판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입니다. 학폭 처리가 지역에 따라 달리 볼 사안이 아닌 이상 전국적으로 비위의 정도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교육청의 처분 사례가 적어도 교육청 단위에서는 공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관되고 정합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이상 학폭사안을 처리하면서 비합리적이고 갈등을 심화시켜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이를 금기하는 인식을 확산하는 등의 선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사법화되는 현상들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미한 사안이거나 저학년 학생들의 사건의 경우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을 높이고 이를 인정하는 체제로 범구조가 전화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조사관제도의 개선, 절차의 전국적 통일, 방어권 보장, 무조건적 분리조치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해 학교가 갈등의 장이 되는 현상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그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 교권 회복 정책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교원정책과장  
신진용

## CONTENTS

### I 추진 배경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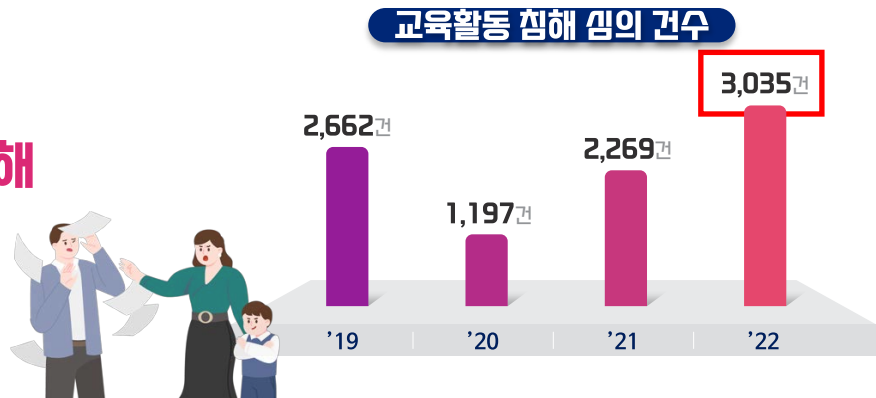
### II 주요 경과

### III 교권 회복 종합방안 및 교권보호 5법 주요내용

### IV 학교 민원응대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지속 증가



## 숨겨진 침해까지 고려시 이미 교실현장은 교육활동 침해로 만연한 상황

### 교육활동 침해 시 교사의 대응 <'22. 한국교총>

모른 채하거나 참고 넘기고,  
혼자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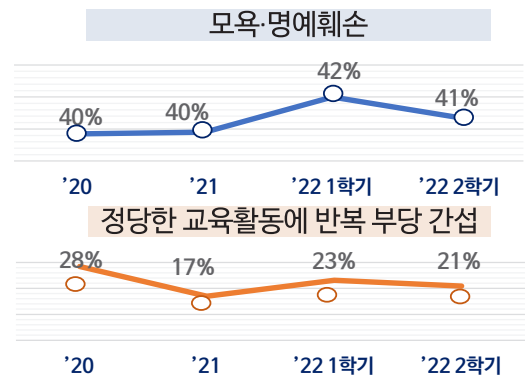
51.7%

2.2%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학부모 등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 부담 간섭 지속



##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 심각

- (현장인식) 다수 교원들이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소



# I

## 추진배경 및 현황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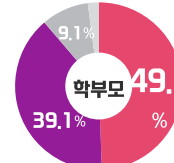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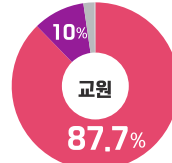
(교원, 학부모)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은?

(교육부, '23)



- 매우 심각하다
- 심각하다
- 보통이다
- 심각하지 않다



교원의 97.7%, 학부모의 88.2%가 어려움 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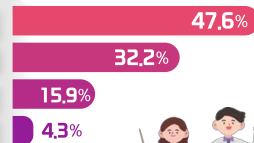
###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교원)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사항

(교육부, '23)

- ①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
- ② 교육활동 침해 예방 시스템 마련
- ③ 학교관리자 등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역량 강화
- ④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캠페인 등 사회적 인식 제고



시사점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활동 침해는 심각  
제도개선과 교육적인 해결방식도 병행 추진

# II

## 주요 경과



'23.8.23. ■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9.1.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해설서 발표, 9.27.)

9.15. ■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 발표

9.21. ■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9.27. 시행)

9.25.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10.6. ■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

11.29. ■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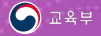
12.7. ■ 「아동학대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6.시행)

'24.2.27. ■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 제작 배포

'24.3.28. ■ 「교원지위법」, 「교원지위법 시행령」 시행

### III

## 교권 회복 종합방안 및 교권 보호 5법 주요 내용



비전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함께학교’**

추진방향

교권-학생 인권  
균형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교원-학부모  
소통관계 개선

추진전략

1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1-1 학생 생활지도  
고시 마련

1-2 불합리한 학생인권  
조례 자율 개선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 2-1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 제고
- 2-2 단위학교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 2-3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강화
- 2-4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3 교원-학부모의  
소통관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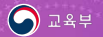


- 3-1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 3-2 학부모-교원 간 상호이해  
증진 및 소통 활성화
- 3-3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민원 대응

추진과제

### III

## 교권 회복 종합방안 및 교권 보호 5법 주요 내용



###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아동학대 개념) 생활지도와 구분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아동학대처벌법」)

(조사·수사 중) 교육현장 특성 반영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제출  
의무화 (「교원지위법」)

- 조사, 수사기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수사 중인 사건은  
교육감의 의견 참고 의무화  
(「아동학대처벌법」)

(조사·수사 중) 교육현장 특성 반영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 (「교원지위법」)



### III

## 교권 회복 종합방안 및 교권 보호 5법 주요 내용



###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책임성 근거 마련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보호자 등의 의무 부여

학교 교육활동 및 교원의 생활지도 전문성, 재량 존중 및 협력

#### 학부모 침해유형 신설

✔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유형 추가

##### 신설유형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사례

- 1 매일 퇴근 직전에 전화해서 한시간 이상 악의성 민원 제기
- 2 학교에 중탕기 보낼 테니, 소화력 약한 초등학생 자신의 자녀에게 우유를 데워서 먹이라고 요청

### III

## 교권 회복 종합방안 및 교권 보호 5법 주요 내용



###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학부모 등 제재 조치

✔ 「교원지위법」 개정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 조치 규정 마련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 민원 처리 책임 부여 등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 부여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III

## 교권 회복 종합방안 및 교권 보호 5법 주요 내용



### 피해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교원지위법」)

- 공무방해, 무고, 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
-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 **즉시 분리** 및 **즉시분리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방법** 마련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 출석정지 이상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 및 **전학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전에 전학을 선행조치**하도록 규정
- 교원 보호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 III

## 교권 회복 종합방안 및 교권 보호 5법 주요 내용



###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계 강화(「교원지위법」)

#### 교육부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

#### 교육청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육지원청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III

## 교권 회복 종합방안 및 교권 보호 5법 주요 내용




###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 진행 인지시 **7일 이내**에  
지자체·수사기관에 **서면 의견 제출**  
※ 교육지원청에서 단위학교 사안 확인, '교육활동 확인서' 제출(5일 이내)


####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교육장 요청, 재적위원 ¼ 이상 요청, **피해교원 요청** 
- 위원장 1명 포함 10명~50명, 소위원회 구성 가능

####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 인지 **즉시** 분리조치 실시  
-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 교원 의사 확인  
- 분리조치 기간(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종합적 고려) 결정  
- 학교 내 분리공간 마련

#### 교원보호공제사업 관리·운영

-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와  
위탁 업무 내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IV

## 학교 민원응대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 학교 민원대응 체계 구축

#### 기관단위 민원 대응





## IV

# 학교 민원응대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 학교 민원대응 체계 구축

### 기관단위 민원 대응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운영



개요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 설치 운영,  
학교 이관 민원 등 학교 관련 민원 처리 및  
학교 민원대응팀 지원

구성

과장급, 팀장급 및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한  
5~10명

역할

학교 민원 이관 및 교육청 자체 민원 처리,  
챗봇 운영관리, 학교 민원대응팀 역량 강화 지원

현황

17개 시도교육청 구성 · 운영 중

## IV

# 학교 민원응대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 학교 민원대응 체계 구축

### 교원 보호

#### 응대 거부권

학부모 등이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 제기 시,**  
**민원 응대를 거부할 권리** 부여



#### 답변 거부권

학부모 등이 교사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제기 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의 원칙, 특이민원 대응 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제작 배포('24.2.)



## 학교 민원대응 체계 구축

##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

## 특이 민원 응대

- 특이민원이란?  
- 교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 부당한 사항 요구, 지속적 반복적인 민원, 보복성 민원 등
- 특이민원 응대 요령  
- (유선) 폭언 시 즉시 고지 후 녹음 실시, 폭언 등이 지속될 경우 통화 곤란 안내 및 법적조치 경고 후 통화종료  
- (면담) 교원이 민원인과 면담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동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학교 민원대응 체계 구축

## 민원 환경 조성

## 민원 면담실

-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개방형 학부모 민원상담실 마련  
※ 민원응대를 위한 별도 공간 지정 → 별도 공간 마련 및 여건 조성 지원 지속
- 면담실 내에 녹음장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 면담실 주변 출입문, 복도 등 통로에 CCTV 설치

현황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마련 · 운영 중

## 교내 유선

-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통화연결음 제작·배포

현황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조치 중



## 학교 민원대응 체계 구축

## 민원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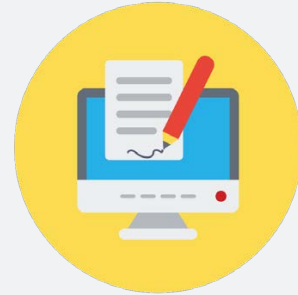
## 온라인 민원시스템

- 다양한 시스템 및 앱 등을 활용, 민원 접수·처리

**일반 민원** 학교 누리집 등 활용하여 민원 처리

**사전예약제** 희망하는 **학교방문**, **유선상담** 등  
일정, **사전 예약** 신청

**출결보고** 학생의 지각, 결석 사유 등을  
온라인으로 학교 전달



**현황** '24. 하반기까지 구축 예정

# 감사합니다

#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

##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학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연장

최대 2년 → 최대 4년

### 심의삭제 요건 강화

- ☒ 피해학생 동의 여부 확인
- ☒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 확인

###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도 반영

※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반영



##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 즉시분리기간 연장

최대 3일 → 최대 **7일**

###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 추가

###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신설

피해학생 요청 → 전담기구 심의 →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 학생 분리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에서  
피해학생 의견청취 의무화

##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보강합니다

###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통합지원

- ✓ 학교폭력 사안조사
- ✓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
- ✓ 피해학생 법률자문 등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

교권보호 및  
책임교사 여건 개선

학교-학생-학부모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합니다

## 전문성·공정성 확보

학교폭력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조사 실시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피해학생 보호



피해-가해학생  
관계 개선



학생 생활지도

#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약속합니다

##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고,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약속하는 규약

### 실천방법

**준비** 공감대 형성 ▶ **계획** 운영 계획 수립  
▶ **실시** 구성원 의견수렴 ▶ **환류** 규약 공개

### 참여방법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행사 및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서명 캠페인 형태로 참여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